

장기일반과정(비영어권) 결과보고서

효율적인 문화예술 지원 방안 연구  
- 독일 문화예술 정책의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이사빈

## 목차

### I. 서론

### II. 본론

#### 1. 독일 문화정책의 특징과 현안

##### 1.1. 독일 문화정책의 역사

- 독일민주공화국(구동독): 1949-1990
- 독일연방공화국(구서독): 1949-1990
- 재통일 이후: 1990-현재

##### 1.2. 독일 문화정책의 특징과 주체

###### 1.2.1. 독일 문화정책의 특징

- 문화에 대한 개념 정의
- 문화정책의 목적

###### 1.2.2. 문화행정의 주체와 기능

- 연방정부: 문화미디어처, 문화미디어위원회
- 연방주와 지방자치단체
- 민간 주체
- 행정주체 간 협업

###### 1.2.3. 대외문화정책과 국제 문화 협력

- 대외문화정책의 방향과 프로그램
- 국제문화교류 및 협력 프로그램

###### 1.2.4. 문화정책의 주요 현안과 쟁점

- “수도 문화”
- 문화사업에 대한 연방의 권한 확대
- 문화 후원의간소화 및 효율 극대화

- 법적 규제
- 문화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유네스코 조약
- 헌법상의 문화 보호
- 시민참여
- 문화재보호법 개정

## 2. 문화예술 복지 정책 및 지원사업의 구체적 예

### 2.1. 예술가사회보험제도

- 2.1.1. 제도의 설립 배경과 대상
- 2.1.2. 정부, 기업, 예술가의 보험 분담
- 2.1.3. 보험 적용의 예
- 2.1.4. 제도의 정착과 현황

### 2.2. 예술가지원사업과 국제교류

- 2.2.1. 독일학술교류처의 레지던시 프로그램
- 2.2.2. 베타니엔 예술가의 집
- 2.2.3. 예술가 체류허가 특혜

### 2.3. 연방 수도 베를린의 문화예술지원사업

- 2.3.1. 사업의 운영방식 및 체계
- 2.3.2. 문화예술기금의 종류
- 2.3.3. 대표 프로그램의 예
  - 베를린 아트워크와 아트베를린
  - 베를린 국제영화제

## III. 요약 및 결론

## I. 서론

본 논문은 우리 부 국정 과제인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 및 “문화교류, 협력 확대”와 관련하여, 선진사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통해, 현실적이며 실효성 있는 정책 및 제도의 개발에 참고하기 위한 자료로서 작성되었다. “문화국가”를 표방하는 독일은 유럽 내에서도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서 전통적으로 문화예술분야는 공공의 자산이자 공적 자원에 의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며, “지원이 아닌 미래에 대한 지속적 투자”라는 개념으로 오랫동안 다양한 정책개발과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특히 독일의 재통합 이후 새로운 연방수도가 된 베를린은 현재 동시대예술에 있어 가장 활발한 창작이 이루어지며 혁신적인 담론이 형성되는 명실공히 예술중심도시가 되었다. 그런데 이는 역설적이게도, 베를린이 연방수도임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16 개 연방주 중에서 재정적으로 가난한 주에 속하기 때문이다.<sup>1</sup> 이는 통일 전에는 구

---

<sup>1</sup> 이와 관련하여 베를린이 국가 경제수준을 하락시키는 유일한 유럽의 수도라는 내용의 2017 년도 이코노미스트 기사가 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독일의 국민 1 인당총생산량(GDP)을 계산할 때 베를린을 제외하면 오히려 수치가 0.2%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영국은 런던을 제외하면 GDP 가 11.1% 낮아지고, 프랑스는 파리가 없으면 14.8% 낮아진다. „Why is Berlin so dysfunctional?“, The Economist, 2017.11.30.

동독지역 내에 섬처럼 자리잡고 있었던 베를린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기업의 자본이 뿌리내리지 못한 역사적 배경에 기인한다. 1990 년의 갑작스러운 통일 이후, 대체로 구 동독에 속했던 베를린은 전반적으로 시설이 낙후된 구역이 많아 집세와 물가가 구 서독 지역의 타도시에 비해 월등히 낮았으며, 이에 가난하고 젊은 예술가들이 모여드는 도시가 되었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독창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는 베를린 시 스스로가 내건 슬로건, “poor but sexy“와 맞아떨어지면서 점점 많은 수의 예술가와 예술향유층을 끌어들이는 효과를 가져왔다.<sup>2</sup>

여기에 국가적 차원의 문화 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노력이 더해졌다. 국공립 미술관을 통합적으로 연계한 베를린 ‘박물관 섬’의 대대적인 보수와 증축 사업, 그리고 각종 예술인 지원 제도와 정책을 통해 베를린은 뉴욕과 런던을 뒤이은 국제 미술의 중심지로

---

<https://www.economist.com/news/europe/21731837-berlinunlike-other-capitals-germanys-drain-rest-country-why-berlin-so>

<sup>2</sup> 이 슬로건은 독일의 정치가이자 2001 년부터 2014 년까지 베를린의 시장을 지낸 클라우스 보베라이트(Klaus Wowereit)의 구호였다. 영국의 가디언지는 2014 년 기사에서 예술가와 혁신가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내세운 이 구호가 실제로 성공하여, 베를린이 명실공히 유럽의 새로운 실리콘 벨리가 되었다는 내용을 다룬 바 있다.

„Berlin’s poor but sexy turns city into European Silicon Valley,“ The Guardian, 2014.1.3.

<https://www.theguardian.com/business/2014/jan/03/berlin-poor-sexy-silicon-valley-microsoft-google>

도약하였다. 이 과정에서 구 동독 지역의 오랜 시설물과 자원을 예술 공공재로 활용, 예술 창작 지원과 관광 자원 개발이라는 이중 효과를 거두었으며, 이는 통일을 고려한 장기적 차원의 우리부 정책 수립에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독일 문화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제 2 차세계대전 이후 문화정책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한 후, 독일 문화정책의 전반적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전통적으로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의 행정제도와 관련하여 각 행정주체들이 문화정책 업무를 어떤 식으로 분담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참조할 만한 부분인, 대외문화정책과 국제교류 부분을 살펴본다. 또한 문화정책분야의 최근 동향을 이해하기 위해, 주요 현안과 논란이 된 정책 등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한다.

## II. 본론

### 1. 독일 문화정책의 특징과 현안<sup>3</sup>

#### 1.1 독일 문화정책의 역사

독일은 다른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는 달리 지방분권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국가로, 자치권을 가진 도시(과거의 제후국)들이 제각각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문화 관련 기관을 설립해 온 역사가 길다. 1871년에 신성로마제국으로부터 독립, 제후국들을 통일한 형태의 독일제국이 세워진 이후에도 각 자치주들의 문화적 특수성은 그대로 유지되며, 제국의 중앙정부는 타국을 대상으로 한 대외 문화 정책을 담당할 뿐, 각 지방 정부의 문화 정책은 자율에 맡겼다. 따라서 독일의 문화 예술은 오래 전부터 시 정부나 지역 사회의 강한 후원 속에서 발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바이마르 공화국(1919-1933)이 건립된

---

<sup>3</sup> 독일의 문화 정책의 역사와 특징을 소개하는 부분은 대체로 유럽 의회 산하 기구로서 유럽 문화 정책과 경향을 연구하는 COMPENDIUM에서 2016년에 발표한 자료를 참고하였다. 독일에 대한 보고서는 문화정책 연구자인 울리케 블루멘라이히(Ulrike Blumenreich)가 작성하였으며 COMPENDIUM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Ulrike Blumenreich, "Germany", Council of Europe/ERICarts, "Compendium of cultural Policies and Trends in Europe, 17<sup>th</sup> edition", 2016.

이후에는, 문화와 예술에 대한 공공의 책임과 지원은 연방 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각 주의 시의회가 분담했다.

다만 1933년에 나치당이 집권하여 각 주의 자치권을 탄압, 문화 정책에 있어서도 중앙집권화를 추구하면서 문화예술은 제국의 선전도구로 이용되는 암흑기를 가지게 된다. 이 시기의 강압적 중앙집권화에 대한 반발과 반작용으로 독일은 이후에 연방제를 더욱 선호하게 되었다고 한다.

나치당의 독재와 제 2 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1945년에 독일제국은 연합군인 미국과 프랑스, 영국이 점령한 독일연방정부(서독)와 러시아가 점령한 독일민주공화국(구 동독)으로 분단되었다. 분단 체제 하에서 서독과 동독은 1990년 독일통일 전 까지 40여년 동안 별도의 문화 정책을 운영, 발전시키게 된다.

### **독일민주주의공화국(구 동독)의 문화정책: 1949-1990**

구 동독에서는 1933년 이전의 문화적 연방주의의 전통이 계승되지 않았다. 구 동독의 영토에 포함되어 있던 연방 주들은 1952년에 15개의 행정구역으로 재편성되었다. 1954년부터는 중앙정부의 문화부가 문화 정책을 주도했다,

구 동독의 문화정책은 한편으로는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인정받는 고전적 예술, 다른 한편으로는 일상 생활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예술이라는 문화 개념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집권당인 사회주의통일당(SED: 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은

문화예술을 포함한 사회 전 분야에 대해 강력한 통제를 시행했으며, 동독에서는 노동자 계급이 문화적 삶의 참여자이자 주체자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상적으로 전통적인 노동운동의 특정 전통만을 포함하는, 편파적 역사관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또한 새로운 형태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기관과 조직들도 새로 만들어졌는데, 이들은 모두 국가의 엄격한 감독과 관리 하에 있었다. 국영 기업의 노동조합, 지방 문화단체 및 각종 협회 등이 소위 대중문화를 후원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러한 기관들이 운영하는 문화 프로그램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사회주의통일당에 의해 조직되었다.

1990년 10월 3일 구 동독이 서독에 흡수 통일되면서 구 동독의 문화정책 노선은 끝을 맺게 되었다. 전통적인 문화예술 기관들은 새롭게 구성된 주나 시 정부의 책임 하에 놓이게 된다. 기존의 국영 기업이나 노동조합에서 운영하던 모든 문화 활동 및 시설은 폐쇄되었으며, 그 중 일부는 관련 협회가 인수하기도 했다. 이러한 경우 별도의 후원자가 동원되기도 했다.

### **독일연방공화국(구서독)의 문화정책: 1949-1990**

제 2 차세계대전이 종료된 이후 서독에 주둔한 연합군은 새롭게 탄생한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의 문화 정책 관련 역할을 최소한으로 축소시켰다. 이는 제 2 차세계대전의 주범인 나치당이 집권할 당시 문화 예술을 악용, 탄압한 것에 대한 결과적 조치였다. 따라서 전쟁 중에 파괴된 문화 시설들을 복구하는 작업 외에는 국가적 타원의

문화정책은 전통적 예술 형태나 문화 기관에 대한 지원 정도에 국한될 수 밖에 없었다. 이는 전반적인 사회 개혁과 현대화, 그리고 시민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난 196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독일의 대표적인 학생운동이자 문화혁명으로 평가되는 1968년의 소위 68 운동을 기점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이후로는 문화정책의 범위와 규모가 확대되면서 사회문화적 활동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1970년대에는 사회의 전반적인 민주화 과정 속에서 “신 문화정책”이 등장하였다. 이 새로운 문화정책의 기본 요지는 일상 생활의 다양한 활동들을 문화가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예술은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에게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1970년대에는 “모두를 위한 문화”, “문화 향유에 대한 시민의 권리”라는 구호가 호응을 얻으면서 문화활동의 범위가 급격한 속도로 엄청나게 확장되었다. 이와 함께 문화기관들이 개발되었고, 수많은 새로운 문화적 활동이 시도되었으며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공의 비용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는 보다 다양한 문화적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변화이기도 했다.

개혁을 주된 목표로 한 1970년대의 문화 정책은 1980년대에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1980년대에는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독일을 다양한 기업과 산업체를 유치하기에 매력적인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는 새로운 국가적 목표가 대두되었으며, 이를 위해 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명제가 전반적인 문화정책의 중심을 이루었다.

## 재통일 이후의 독일 (1990 년 이후)

1990 년대는 독일의 통일이 사회 모든 분야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문화 정책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특히 구 동독 지역에서는 행정구역이 전통적인 연방 주의 형태로 다시 재편되고 문화 정책 역시 연방주의적 요소가 강화되면서 문화 예술의 지형이 새롭게 구축되는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또한 이 시기는 긴축정책과 예산 삭감으로 인한 한계, 그리고 대형 전통 문화예술 기관들의 구조적 문제들이 점차 드러나는 시기이기도 했다.

1990 년대의 변화와 어려움에 비해 2000 년대 초반에는 독일의 문화정책이 안정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현재에도 독일의 문화정책은 당면한 과제가 산재해 있으며, 사회와 시대의 변화에 맞춰 지속적인 방향 재설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는 전세계적 금융 위기의 악영향으로 인해 지역 단위의 문화 관련 재정이 큰 타격을 입었으며, 그로 인한 부정적 결과들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연방 정부나 일부 주정부의 문화 예술 관련 예산 상황이 개선되기도 했지만, 모든 문화기관들은 재정 관련 압력을 받고 있는 처지이다. 즉, 기관 운영 방식을 보다 경제적으로 자립 가능한 구조로 개선하거나 독자적으로 재정후원이나 마케팅, 기금 등의 도움을 받도록 유도되고 있는 것이다,

문화예술기관의 재정과 관련하여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국가와 시장, 사회의 관계가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립과 사립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새로운 형태의 파트너십 모델, 그리고 시민사회의 참여 강화 등의 방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게다가 과거의 문화정책은 이민자의 급증과 미디어 환경의 급속한 변화, 문화향유계층을 구성하는 인구의 변화(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노년층의 비율이 증가) 등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끊임없는 수정과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독일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관련하여 문화 정책이 어떻게 보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 1.2 독일 문화정책의 특징과 주체

### 1.2.1 독일 문화정책의 특징

독일의 문화정책은 무엇보다도 연방주의 모델에 기반하고 있다. 이는 지방분권, 분산, 다원성이라는 원칙들이 문화정책의 가장 중요한 근간을 이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지방분권이 오랫동안 뿌리 내려온 독일의 역사와 전통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문화정책의 이러한 원칙들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연방 주정부에서 시의회까지 모든 종류의 자치 정부는 헌법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각각의 권한을 행사하며 문화 영역에서의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문화 관련 문제에 있어서는 상호 간의 협력과 연계를 통해 문화예술기관과 활동을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실제로는 다양한 지역별로 연방 주와 시 정부 문화 기관, 그리고 예술가들 사이의 경쟁의식이 높은 편이다.

독일 전역의 문화정책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문화예술 기관과 프로그램의 존속을 가능케 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공공영역의 책임을 다하면서도, 그러한 문화적 활동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두 가지 과제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헌법에는 예술의 자유에 대한 보장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예술적 자율성, 그리고 문화 기관 및 조직의 자치권에 대한 근거를 할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콘텐츠를 정부의 규제나 지시로부터 보호하는 일종의 방어벽 역할도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일의 연방정부는 문화국가(Kulturstaat)라는 개념 하에서 예술적 자유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후원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sup>4</sup>

---

<sup>4</sup> (Kulturstaat, 사회와 문화 발전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것을 이념으로 하는 국가. 소극적으로 자유의 보장을 주안으로 하는 법치국가보다 태도가 적극적임. 문화국가의 이념은 원래 독일에서 경찰국가·법치국가 등의 이념에 대립하여 주장된 것이다. 근대국가는 이것을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주된 목표로 하여 국가권력의 남용을 제한하는 법질서의 체제(법치)라 이해하였으며, 권력이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의 복지에 대해서도 위로부터 배려한다는 종전의 경찰국가를 대신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에 대해서 독일의 관념론 철학은 국가권력 그 자체가 영국, 프랑스, 미국에서처럼 자유를 억압하는 대립적인 것이 아니고, 민족정신, 인류의 고차원적 문화를 창달하는 주체자이며 국가의 존재이유도 이와 같은 정신·이념·문화의 실현에

문화정책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기본적으로 공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대부분의 문화 기반 시설이 법의 규제 하에 있으며 정부, 주로 각 주의 지방 자치제 당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운영된다는 것이다.

보다 최근에는 문화관련 공공 서비스 및 공공기관의 민영화와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예술 경영의 효율성을 증진하려는 노력을 강화되었다. 그 결과, 공영/민영 협력 모델에 대한 수용이나 일부 문화 기관의 민영화에 대한 사회 전반의 태도가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측면도 있다.

이 외에도 수년 간 진행된 논의 중 하나로 다양한 행정자치 정부들 사이의 기금 분담 및 확대와 관련한 문제를 들 수 있다. 예컨대 많은 주정부들이 재정문제에 부딪치자, 특정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주요문화기관”의 경우에는 연방정부가 주정부와 재정지원 역할을 공동으로 분담해야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1990년의 통합조약에는 구동독 지역에 위치한 주의 문화 기관들과 관련하여 연방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사례가 포함되기도 하였다.

---

있다고 생각하여 이러한 문화국가 개념이 주장되었다. 또 제 2 차 세계대전 전후부터는 단순히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치국가의 결점을 보완하여 국가가 국민의 생활·교육·과학 등의 배려를 하는 것이 문화국가라고도 주장되었다(사회법치국가 또는 복지국가와 같은 뜻으로 이해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문화국가”항목참조.

이는 재통합 이후 독일의 새로운 수도가 된 베를린의 문화 기반 시설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베를린 소재 문화예술 기관들의 경우, 통일 이후에 수많은 구조적, 재정적 문제에 맞닥뜨리면서 연방 단체들의 상당한 도움과 호원을 필요로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방에서 관여하게 되면 기관의 의무와 권한이 확대되는 것과 더불어 문화적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적 차원에서의 발언권이 훨씬 강해진다. 이러한 점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다른 연방주들에 의해 비판을 받기도 한다.

### 문화에 대한 개념 정의

독일에는 문화 관련 프로그램 및 정책의 근거로 삼을 만한,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문화에 대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독일 연방공화국의 건립 직후 20여 년의 상황과는 달리, 현 시점에서는 다양한 단계의 자치정부 사이에 문화에 대한 개념이나 철학에 대체로 큰 차이가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다양한 자치정부들 사이의 이견이 좁혀진 이유 중 하나는 1970년대 초에 대두된 “신문화정책”의 맥락 하에서 문화정책 관련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1970년대의 논의 과정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주를 이루었던 문화에 대한 편협한 개념을 보다 확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과거로부터 대대로 계승되어온 전통적인 문화가치체제의 유지에 초점을 맞추었던 기존의 문화 개념은 새로운 콘텐츠와 초점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문화”라는 단어는 동시대의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활동(전통적 문화예술 기관의 맥락

내외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포함)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의 문화까지를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 문화정책의 목적

1970년대의 “신문화정책”은 시작부터 내세우는 문화적 정체성과 문화유산 보존, 문화 다양성과 생활 속 문화 참여 등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가 내세우는 개념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오늘날 독일 연방 공화국 문화정책의 주된 목적 중 하나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문화예술 향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회정책으로서의 문화정책은 인구의 변화와 이민자의 유입, 가치체계의 변화, 재정적 개발, 경제효율화, 디지털화 등과 같은 사회적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기쉬우며 이러한 변수들을 고려해야한다는 점에서 어려운 점이 많다. 최근 몇 년 동안에는 독일을 이민자의 나라로 인식하는 변화가 문화 분야에서 새롭게 나타나기도 했다. 따라서 문화 정책 또한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맞춰 이민자의 유입이라는 요소를 고려해야하며, 이는 특히 각 연방 주의 자치정부 단위에서 더욱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즉, 문화정책의 개발과 시행에 있어 다문화적 다양성을 기본 전제로 받아들여야 하며, 이민자들의 문화를 정책 내에 녹여낼 수 있어야 하고, 이민자 출신의 시민들이 요구하는 문화적 수요 또한 고려해야한다는 의미이다.

## 1.2.2 문화행정의 주체와 기능

독일은 연방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층위의 정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연방정부, 연방주, 그리고 지방자치제 당국(시, 면, 읍에 해당)의 세 단계가 그것이다. 독일 헌법(기본법)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지방자치제 당국이 분담하는 권한과 책임의 범위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독일 헌법 제 30 조는 대부분의 권한을 주정부에 위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독일 헌법이 별도로 규정하거나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주정부의 권한과 권력은 주에 귀속된다.“ 있거나 연방의 권력과 권한을 실행하는 것은 주의 권한이다. 현 시점에서는 특별히 연방정부에게 문화나 교육과 같은 분야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헌법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각 연방 주정부는 문화 분야에 있어서 주된 공적인 주체로서 자체적으로 정책 과제를 설정하고 각종 문화 기관들의 재정을 지원하고 지역 내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후원하는 역할을 전담하는 셈이다.

독일 헌법 28조 2항은 문화 사업과 관련한 지방자치당국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 연방 주의 헌법에도 이 부분이 명시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당국의 문화적 책임 및 권한에 대해 보다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분권이 고도로 발달한 연방제 체제 하에서 문화정책을 만들어내고 시행하는 주체가 다수 존재한다. 즉, 입법기관이나 자치기구(의회 등), 주정부 산하의 행정기관(문화 담당 부처), 혹은 자문기구(전문가 위원회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주체나 기관들의 규모나 구조는 각 지역별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당국은 각각의 필요와 수요에 따라 문화정책을 자유롭게 기획하고 시행할 수 있다. 즉, 독일 각 지방의 문화 관련 프로그램의 형식과 내용, 수량과 주안점 등은 각 지방의 행정기관들이 모두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 연방정부

연방정부는 외국의 문화 정책과 관련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의무교육기관과 고등교육기관과 관련된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이 부분을 제외하고, 국가 전체나 국제적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기타 문화 정책의 경우, 주 정부 기관들이 어느 정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1998년에 연방정부는 최초로 문화 미디어 연방 장관( der Beauftragte für Kultur und Medien)이라는 직책과 산하기관으로 문화미디어처를 총리실 직속으로 신설하였으며, 이로써 처음으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문화 관련 사안들을 총괄, 혹은 관장하는 역할을 지닌 중앙부처가 생긴 것이다. 이는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를 지닌 우리 문화부에서 참고할만한 중요한 조직이라 본고에서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 독일 연방 문화미디어처

### 기능 및 조직

문화미디어처는 독일연방정부 내각 부서는 아니며 총리실 소속으로 문화 및 미디어 관련 업무에 대해 총리를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처장(長)은 장관급 대우를 받기 때문에 장관(Staatministerin)이라는 호칭도 겸용하고 있다. 현 처장은 2013년 12월에 임명된 모니카 그뤼터스(Monika Grütters)가 맡고 있다.<sup>5</sup>

조직은 총 4국, 21과로 직원 수가 190여명에 이른다.

### 임무 및 주요정책

문화미디어처의 주요 임무는 웹사이트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 문화 및 미디어 분야 관련 연방 차원에서의 법제 기반 개발 및 개선

---

<sup>5</sup> 연방 문화미디어처를 이끈 역대 장관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미카엘 나우만 Michael Naumann (SPD) 1998 -2001

율리안 니다 뤼멜린 Julian Nida Rümelin (SPD) 2001 - 2002

크리스티나 바이스 Christina Weiss (무소속) 2002 - 2005

베른트 노이만 Bernd Neumann (CDU) 2005 - 2013

모니카 그뤼터스 Monika Grütters (CDU) 2013-2018 현재

- 국가적 문화시설 및 관련 프로젝트 지원
- 연방수도 베를린의 문화적 대표성 확보
- 독일 대표로서 국제무대에서 문화 및 미디어 정책 관련 독일 이해관계 대변
- 나치정권 만행 및 희생자 관련 국가 기념물 관리
- 구동독 만행 관련 기념물 및 기관 관리

이상의 기본 임무 외에도 2013 년의 대연정 이후 신정부 연정합의서에 따른 중점 정책이 소개되어 있다.

#### 신정부 연정합의서에 따른 중점 정책

- 문화정책 및 재정지원을 위한 연방 및 주정부간 협력 강화
-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안정화
- 저작권보호제도 개선
- 문화유산 디지털화
- 영화제작 지원 강화
- 홈볼트 포럼 활용방안 지속 개발

이상에서 보듯, 연방 차원의 넓은 영역 문화 및 미디어 정책은 문화미디어청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미디어청의 세부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문화예술 관련 재단 및 시설운영 지원

연방문화재단, 프로이센 문화재단, 바이마르클래식 재단 등의 각종 문화 관련 재단을 비롯하여, 각종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서보관소 등 국립문화시설의 운영을 지원한다.

예술분야의 경우, 베토벤 하우스(Beethoven Haus), 바흐 기록보관소 (Johann Sebastian Bach Archiv) 등의 음악 관련 시설의 운영을 지원하며 바이로이트 축제(Bayreuther Festspiele) 등의 음악 행사를 지원한다.

문학의 경우, 문학관련 문화재 보존, 현대문학 창작을 지원하며, 독일로 망명한 작가의 경우 생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독일어 관련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하는 업무도 문학 부문에서 관할하고 있다.

그 외에도 연극, 무용, 문화재 보호 및 소수민족 문화 보호 등이 문화미디어처의 업무에 해당한다.

미디어 분야 지원 업무는 대략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 미디어교육
- 아동 네트워크: 아동용 인터넷 콘텐츠 육성 프로그램 지원
- 프린트미디어 이니셔티브: 출판 미디어 육성
- 비전 키노(Vision Kino): 청소년 대상 영화 및 미디어 교육
- 독일게임대상: 독일 게임산업협회 및 개발자협회와 함께 우수 게임 선정

독일연방 문화미디어처의 주요 산화기관으로는 프로이센 문화재단(Stiftung Preußischer Kulturbesitz)과 연방문화재단(Kulturstiftung des Bundes, KSB)이 있으며, 이 두 기관은 독일 전 지역에서 중요한 문화사업의 주체로 각종 기관과 행사를 운영, 후원한다.

### 프로이센 문화재단(Stiftung Preußischer Kulturbesitz)

프로이센 문화재단은 독일 전역에서 최대의 문화시설을 운영하는 재단으로 1957년 법정 재단으로 설립되었다. 베를린의 주요 관광지로도 유명한 박물관 섬의 관리를 비롯하여 다양한 문화 관련 기관을 소유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프로이센 문화재단의 업무는 훔볼트 포럼이라는 새로운 문화예술기관의 건축 및 개관 관련 업무이다.<sup>6</sup> 독일 연방정부는

---

<sup>6</sup> 2002년 독일연방의회는 프로이센왕국 시절에 세워진 베를린 성(城)을 복원하고, 이곳에 범세계적인 문화·예술·학문의 중심 기능을 수행하는 ‘훔볼트 포럼’을 출범시키기로 결정했다. 이 프로젝트는 19세기 초반 대학과 박물관 및 도서관의 통합을 통해 국경과 인종을 초월하는 예술, 문화, 학문을 위한 자유로운 공간을 설립하고자 했던 훔볼트 형제의 이념을 계승한 것이다. 총예산 5억 5200만 유로가 투입되며 프로이센문화재단과 베를린 국립박물관, 중앙 및 주립도서관, 훔볼트대학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박물관섬 남쪽 옛 성이 있던 자리에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신축 중인 건물은 2008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이탈리아의 건축가 프랑코 스텔라가 설계했다. 스텔라는 바로크 양식으로 베를린성의 상징인 멋진 돔을 복원하고, 북서쪽은 현대적인 디자인의 건물을 배치해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공간을 구상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총면적 5만

2002년에 제 2 차 세계대전 중 파괴된 베를린 궁을 재건하면서 이를  
훔볼트 포럼이라는 이름의 문화예술기관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으며,  
2013년 여름에 기공식을 가졌다. 훔볼트 포럼은 비유럽지역의  
문화, 생활, 학문 포괄하는 센터로 기능할 예정이다. 2018년 현재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 건물은 박물관 및 주요 관광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데, 베를린 남서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던 기존의 아시아박물관(Museum für Asiatische Kunst)과  
인류학박물관(Ethnologisches Museum)이 훔볼트 포럼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베를린 박물관 섬 소재 박물관들의 보수 및 개관, 전승  
가능한 문화유산 보존, 프로이센 소장품 관리, 민족간 문화교류 관련  
학문, 교육 육성 등이 프로이센 문화재단의 주요 업무에 해당한다,

---

5000 m<sup>2</sup> 규모의 포럼은 아고라, 학문의 장, 전시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아고라는 연극, 영화, 음악을 위한 다기능성 행사 공간으로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지역의 현대예술 공연을 위한 공간과 학술, 문화, 정치를  
위한 토론의 장을 제공하게 된다. 학문의 장은 최고 수준의 연구를 위한  
학문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곳에서는 베를린시립박물관의 유럽  
외 지역 수집품에 대한 연구와 훔볼트 대학이 소장하고 있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학술 수집품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 훔볼트 포럼 전체 면적의  
절반가량인 2 만 4000 m<sup>2</sup>을 차지하는 전시 공간에는 베를린  
국립박물관 산하 인류학박물관과 베를린시 외곽에 있는 달렘  
동아시아박물관이 이전하게 된다. “함혜리 선임기자의미술관 건축 기행,  
문화프로젝트 베를린성-훔볼트 포럼”, 서울신문, 2014

## 연방문화재단 (Kulturstiftung des Bundes, KSB)

2002 년에 설립된 연방문화재단의 업무와 역할은 주로 혁신적 예술 프로젝트, 국제 예술 프로젝트의 지원과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컨대 시각예술분야에서 전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미술 행사인 카셀의 도큐멘타나 베를린 영화제 등의 진행과 관리가 연방문화재단의 업무 중 하나에 해당한다. 또한 국제 파트너십을 통한 공동 개발 프로젝트의 시행 역시 재단의 업무에 포함되는데, 주로 한시적 프로젝트 위주이다. 연방문화재단 본부는 할레(Halle)에 있으며, 재단의 운영위원회는 연방대표, 각 주대표, 예술 및 문화분야 대표로 구성된다.

연방문화재단의 주요 업무에는 특히 연방 수도인 베를린에서 이루어지는 다음과 같은 문화예술 관련 국제 행사들이 포함된다.

- 베를린 연방 문화행사(KBB: Kulturveranstaltungen des Bundes in Berlin)
- 베를린 영화제(Berlinale), 세계문화전당(Haus der Kulturen der Welt)
- 베를린 축제(Berliner Festspiele):베를린 문화 프로그램의 명칭으로 마틴 그로피우스 바우(Martin Gropius Bau) 미술관을 운영하고 베를린 재즈 축제, 음악 축제, 서커스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주최한다.
- 베를린의 독일역사박물관(Deutsches Historisches Museum), 유대인박물관(Jüdisches Museum Berlin) 등의 기관

## 연방의회 문화미디어위원회

한편, 1998년에 연방 문화미디어처가 신설되면서 독일의 연방의회(Bundestag)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문화미디어위원회(Ausschuss für Kultur und Medien)를 구성했다. 문화미디어위원회는 연방 문화미디어처의 업무, 그리고 독일 외교부(Auswärtiges Amt)의 외국 문화 정책 담당 부처의 업무를 감독, 관리하는 조직이다.

독일 연방의회의 문화미디어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는 문화와 관련하여 신규 발의되는 법안이나 수정안들에 대하여, 이들이 실제로 문화에 미치게 될 영향이나 효력(Kulturverträglichkeit)을 검토하는 것이다.

예컨대 비영리 문화기관의 조세법 특별 조항과 같은 문제가 이 위원회의 검토 대상이 된다. 또한 국가적 중요성을 지니는 문화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제기하는 것도 위원회가 하는 일이다. 예를 들어 홀로코스트의 희생자들, 혹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발생한 난민이나 폭격 희생자들을 기리는 기념비의 건립 등과 같은 문제는 전 국가적 차원의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위원회에서는 예산과 관련한 결정도 담당한다.

연방의회의 문화미디어위원회는 1998년에서 2000년까지 사민당(SPD)의 엘케 레온하르트(Elke Leonhard), 2000년에서 2005년까지는 역시 사민당 소속 모니카 그리판(Monika Griefahn), 2005년에서 2009년까지는 자민당(FDP)의 한스 요아힘

오토(Hans Joachim Otto), 그리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현재 문화미디어 장관인 기민당(CDU) 소속의 모니카 그뤼터스(Monika Grütters)가 이끌었으며, 2013년 이후로는 사민당의 지그문트 에르만(Siegmund Ehrmann)이 회장직을 맡고 있다.

연방의회의 문화미디어 위원회 산하에는 여러 개의 전문 분과들이 있다. “해외문화관계 및 교육 정책“, “시민참여“, “뉴미디어“ 분과 등이 그 예이다.

2003년 가을에는 독일의 문화에 대한 심리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열렸다. 이 심리위원회에는 연방의회에서 11명의 의원과 11명의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심리위원회의 주된 업무는 문화정책 전반 및 문화의 지원과 관련된 광범위한 문제들을 점검하는 것이었다. 심리의 결과물인 1,200 쪽에 달하는 최종 결과보고서에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각각의 문화 정책수립과 관련하여 459개의 구체적인 권고안들이 수록되어 있었다. 이는 2007년 11월 13일에 공개, 발표되었다. 이 결과보고서는 현재까지도 독일의 문화정책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문서로 평가된다.

2009년에서 2013년 사이에는 “인터넷과 디지털 사회” 및 “성장, 복지, 삶의 질”에 대한 심리위원회가 만들어졌다. 그 결과물은 독일연방의회 총회에서 발표 및 논의되었다.

## 연방주와 지방자치단체

연방제가 발달한 독일의 문화정책은 주로 연방주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문화정책의 규모나 범위, 주안점은 연방주마다, 그리고 지방자치 행정구역 별로 상당히 다양하다.

16개의 연방주들은 자체적으로 주의회와 문화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주의회 소속 위원회, 그리고 문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부처는 대체로 문화를 교육이나 과학 분야와 통합된 형태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문화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특정한 부서가 있다. 2004년과 2005년에는 몇몇 연방주에서 이러한 전통을 폐지하고 문화와 관련된 권한과 업무를 모두 주청사(Staatskanzlei) 위임했는데,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Nordrhein Westfalen) 주, 쉘레즈빅 홀슈타인(Schleswig-Holstein) 주, 베를린과 브레멘의 경우가 그러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대체로 문화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특정한 문화위원회(Kulturdezernenten)를 산하에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문화위원회들은 자체적으로 결정한 행정 체제로 운영된다. 문화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의 극장이나 도서관, 박물관, 음악학교 등의 공공 문화기관을 관장한다. 시의회 등 지방자치당국의 의회에서도 자체적으로 문화행사 관련 위원회를 운영한다.

각각의 연방주들은 자신의 주에 속한 지방자치당국에 대하여 문화관련 예산을 자체적으로 이전시킬 수 있는 재량권을 지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예로 “작은 자치주의 문화 지구에 관한 법률”을 들

수 있다. 이 법률은 1993년에 처음으로 통과되었으며, 당시에는 기한을 10년으로 규정하였으나, 그 이후에 특정 기간에 한하여 연장되었다. 2998년에는 기한에 대한 조건이 해제되었다. 이 법률은 연방주의 예산 86.7백만 유로를 5개의 농촌 지역과 3개의 도시 지역으로 이전하여, 해당 지역의 문화 기관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2011/2012년에 다시 한번 개정되어, 원래 연방주에서 관리하던 작센의 주립극장(Landesbühne Sachsen)에 대한 권한과 예산을 해당 지역으로 위임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게 되었다.

바덴뷔템베르크(Baden-Württemberg)를 비롯한 일부 다른 연방주에서는 예컨대 연극과 같은 개별적인 분야에 대한 지원의 경우 연방주와 지방자치당국의 공동으로 재원을 지원하는 형태를 도입하고 있기도 하다. 이 경우에는 지방자치당국의 총 지출액에 대해 연방주가 일정한 비율로 재정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2006년 9월 1일에는 연방제에 대한 개혁이 실행되었는데, 여기에는 일부 정책과 관련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사이의 권한의 범위를 재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문화 부문에 있어서는 연방수도인 베를린의 문화정책, 그리고 문화유산의 보존에 대한 연방주의 권한과 책임이 범위가 보다 확대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또한 유럽연합 내에서 문화정책과 관련한 독일의 역할도 보다 강조된 것도 중요한 변화 중 하나였다.

## 민간 주체

정부 기관과 조직들 이외에도 다양한 문화 관련 프로그램의 지원에 관여하는 요인들은 많다.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국, 사업기관, 다양한 사회단체(교회 등의 종교기관, 조합, 협회 등), 시민단체, 그리고 개인 등은 모두 한 사회의 문화적 활동에 있어 중요한 요소를 이룬다.

연방주정부와 해당 지역 실제적인 문화활동을 이끄는 주체들 사이의 광범위한 상호교류 네트워크야말로 독일에서 공공 영역의 문화생활을 보다 활기차고 진취적으로 만드는 데 있어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다. 문화를 후원하는 스폰서와 문화활동의 수단을 다원화시키는 것은 구조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러한 다원주의의 기본 원칙은 독일의 헌법과 법률에도 문화 부문에 명시되어 있다. 다양한 형태의 상업적인 문화활동 역시 독일의 문화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된다.

문화활동과 관련하여 연방주정부와 정부외적 주체들 사이의 협업이나 조정에 대해 어떤 정해진 형태나 양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연방정부나 주정부 혹은 지방자치당국에서 주최하는 문화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일종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중간 기관들이 관여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특히 정부의 문화 지원 프로그램을 보완하거나 문화기관들을 위한 재정 후원을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된다.

## 행정주체 간 협업

연방정부나 주정부, 지방자치 당국의 문화 정책 법안이나 프로그램, 각종 조치들을 관리하는 공식적인 기구나 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연방주들 간의 협업이나 교류와 관련한 사안은 독일연방공화국 연방주 문화교육장관들 간의 상설 협의회(Ständige Konferenz der Kultusminister der Länder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약칭 KMK)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들 차원의 상호 교류와 협업을 위한 플랫폼으로 독일시협회, 독일시읍협회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협회들은 문화 행사 중에서도 연방주 혹은 더 나아가 연방 차원의 협업이나 영향력이 잠재되어 있는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특별 위원회나 부서를 만들어 이에 대응한다. 여기에서는 특정 사안에 대한 추천이나 권고안을 준비하여 해당 지방자치 당국에 제출하기도 한다.

연방 문화미디어처(BKM)는 필요에 따라 특정한 사안에 대해 연방주 문화교육장관간상설협의회(KMK)와 협업하는 경우가 많다. 실무진 차원에서는 정기적으로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연방주 문화교육장관간상설협의회의 산하의 여러 위원회 중에서도 유럽및국제문제위원회나 연방주 영화위원회의 경우에는 정기 회의 때마다 문화미디어처의 대리인이 참가하는 것이 그 예이다.

연방주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상호 협력이나 협의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관련 부처들 간, 혹은 개별적인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소통

외에도 연방주 전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기관들과 주정부 사이에서도 협의가 이루어진다.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로 다른 지역 간의 협의와 협업을 보다 용이하고 활발하게 진행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 기구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문화관련 지역회의를 주최하여 이런 종류의 협업을 다루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있다.

문화 정책을 다른 분야의 정책과 조직적으로 결합하는 방식, 그리고 전략적 기획은 지방자치당국, 주정부, 연방정부 마다 접근법이 다르다. 그러나 모든 형태의 정부에서 문화 관련 예산이 감소함에 따라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나 문화 정책의 목적 설정에 있어서 각 정부 간의 상호 협업과 협조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렇게 지역과 조직의 경계를 종적, 횡적으로 넘나드는 상호교류와 협업이 증가하고 강화되는 일반적인 추세 속에서 몇몇의 실무단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 중 한 예로 „문화와 통합“ 실무단의 출범을 들 수 있는데, 연방문화미디어처 산하에 만들어진 이 실무단은 연방정부 소속 직원들과 연방 주정부 및 시정부 직원들, 그리고 민간 조직의 대표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외에도 유럽의 도서관, 아카이브, 박물관, 문화재보존 문제를 위한 실무단(Europäische Angelegenheiten für Bibliotheken, Archive, Museen und Denkmalpflege, 약칭 EUBAM)이 있으며, 이 실무단에는 연방주 문화교육장관간상설협의회(KMK) 소속 회원들과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부처실무자들, 독일연구재단(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 약칭

DFG) 회원들, 그리고 도서관, 아카이브, 박물관 및 문화재 보존 관련 전문가들이 속해 있다.

### 1.1.3. 대외문화정책과 국제문화협력

#### 대외문화정책의 방향과 프로그램

1960년대에 대외문화정책이라는 새로운 개념에 대한 논의가 일어난 이후로 문화정책은 독일 외교에 있어서 안보정책과 경제정책 다음으로, 즉 세번째로 중요한 축이 되었다.

1980년대에는 대화와 소통을 강조한 방식의 정책 개발에 대한 기본 개념과 아이디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며, 이는 주로 독일연방외부무가 주관하는 회의 등을 통해 주도되었다. 현재는 민간단체나 지방, 지역 조직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대외문화정책분야에 있어서는 독일연방외교부의 역할이 여전히 핵심적이고 주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말 이후로는 대외문화정책의 새로운 목표와 방식에 대한 심도 있고 집중적인 논의가 지속되어 왔으며, 이러한 점은 그 이후에 발표된 “구상Konzeption 2000”, “민간 위기 예방, 분쟁 해결, 평화 강화를 위한 시행계획 Aktionsplan zivile Krisenprävention, Konfliktlösung und Friedenskonsolidierung“ 등의 정책성명서에 효과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2005년과 2009년의 연방 총선거 이후에는

연방정부에도 정치적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 과정에서 대외 문화 정책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다시 새롭게 제기되기도 하였다. 2006년과 2007년에는 대외문화정책의 정치적 중요성을 새로이 강조하고 미래의 정책개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들이 연달아 개최되었다

이전의 20년 동안 대외문화정책은 예산이 반복적으로 삭감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경향은 2005년에 정치적 문제에 대한 대외문화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에 상응하여 연방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전과는 달리 2005년 이후 몇년간 대외문화정책에 대한 지원금이 점차 늘어나면서 2009년에는 총 373.8백만 유로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는 당시 연방정부의 문화 관련 지출 비용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액수이다. 2012년에는 대외문화정책과 관련한 기금이 408.6백만 유로에 달하였다. 2007년에서 2012년 사이에 이렇게 비용이 증가한 것은 무엇보다도 괴테 인스티튜트(Goethe Institutes) 라고 불리는 독일문화원에 대한 지원금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현재는 세계 총 98개국에 159개의 괴테독일문화원이 설립되어 있다.<sup>7</sup>

---

<sup>7</sup> 괴테 인스티튜트는 전세계에 설립되어 있는 독일연방공화국의 문화기관으로 언어, 문화, 독일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괴테 인스티튜트는 해외에서 독일어 지식을 널리 전파하고 국제 문화협력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포괄적인 독일상을 제시하고 독일의 문화/사회/정치적 상황에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괴테 인스티튜트의 문화/교육프로그램은 다문화간의 대화를 촉진시키고 문화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 괴테 센터, 각종 문화사업단, 열람실,

## 공공 주체 혹은 요인과 문화외교

독일 헌법의 32조 1항에는 대외관계에 관하여, “외국과의 관계는 연방정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헌법조항에 의거하여 연방정부의 기관과 의회는 대외문화정책을 관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외 문화정책의 우선순위와 주안점을 규정하는 정치적 가이드라인은 연방외교부에 의해 기획 및 작성된다. 특히 연방문화미디어처는 몇몇 중요한 분야의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데, 그 예로 해외 방송 관련 정책이나 약탈 문화재와 같은 예술작품의 반환과 관련된 정책들을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연방정부의 여러 부처 중 연방교육연구부(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와 연방경제협력개발부(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und Entwicklung)가 대외문화정책에 일부 관여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관여의 범주와 정도는 외교부와 연방문화미디어처에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1969년 이후로 독일 연방의회 산하에도 간헐적으로 대외 문화 정책과 관련한

---

시험 및 어학센터 등의 네트워크로 구성된 괴테 인스티투트는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독일을 찾는 수많은 이들이 가장 먼저 접촉하게 되는 제 1 창구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한국의 경우 주한독일문화원이라고도 불리며 1968년에 현재의 위치인 서울 남산에 건립되었다. 주한독일문화원 홈페이지의 기관 소개 및 연혁 참조.

<https://www.goethe.de/ins/kr/ko/uun/auf.html>

위원회가 존재해왔다. 현재에는 의회의 „외교위원회“의 산하 조직이 이 업무를 담당한다.

1970년대에는 연방의회가 „대외문화정책“에 대한 심리위원회를 열기도 했다.

대외 문화 정책의 실행에 있어 세 번째 중요한 중심축은 대외 문화 관계 및 교육 정책(Auswärtige Kultur- & Bildungspolitik, 약칭 AKBP)으로 이는 교육과 과학, 국제적 문화교류, 독일어의 해외 홍보, 그리고 시각예술, 음악, 문학 분야에서의 상호교류에 대한 협업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1년에 연방외교부는 새로운 개념의 대외 문화 관계 및 교육 정책을 발표했다. 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대외 문화 관계 및 교육정책은 파트너쉽을 확대하고 가치를 교류하며 관심을 대리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다.

2013/2014 년에 발표된 연방정부의 18번째 보고서에는 대외 문화 관계 및 교육 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주안점들이 열거되어 있다. For the period 2013/2014 the following main focusses are listed in the 18th report of the Federal Government concerning AKBP: 문화, 체육, 교육, 협력과 대화, 해외에서의 독일의 이미지, 지역적 주안점. 2013년에는 대외 문화 관계 및 교육 정책의 소요 비용이 1,571백만 유로, 2014년에는 1,591백만 유로에 달하였는데, 이 금액의 절반 가량은 연방외교부의 대외 문화 관계 및 교육 정책 부분 예산에서 사용되었다.

2014년에는 외교부 주최로 대외문화정책 분야와 관련하여 „대외정책 준비-독일의 대외 정책의 관점에 대한 자각“이라는 일종의 평가 과정이 실시되기도 했다.

당시 연방 외교부 장관이자 2018년 현재 독일의 대통령인 슈타인마이어(Frank-Walter Steinmeier)는 2015년에 국제전문가와의 인터뷰, 독일 국민과의 토론, 그리고 외교부 직원들과의 토론이라는 총 3단계의 대화 과정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중단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점 과제는 세 개의 키워드로 수렴되었다: 위기, 질서, 유럽. 슈타인마이어는 특히 위기와 충돌을 예방하는 데 있어 문화의 사회적 힘을 무엇보다도 강조하였고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대체로 이 정책은 다음과 같은 연방외교부 산하의 다양한 조직과 기관들을 통해 보완 실행된다. 각 기관은 독립적으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다.

- 독일문화원Goethe-Institut (GI), [www.goethe.de](http://www.goethe.de)
- 독일학술교류처(DAAD) [www.daad.de](http://www.daad.de)
- 대외관계연구소Institut für Auslandsbeziehungen (IfA), [www.ifa.de](http://www.ifa.de)
- 알렉산더훔볼트재단Alexander von Humboldt-Stiftung (AvH), [www.humboldt-foundation.de](http://www.humboldt-foundation.de)

- 독일유네스코위원회 Deutsche UNESCO Kommission (DUK)  
www.unesco.de

대외문화정책 분야에 있어서는 주 정부의 관련된 기관들과 연방정부 사이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진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도 해외의 문화관련 사업에 활발히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 국제문화교류 및 협력

문화 영역에서의 국제적 교류와 협력의 중요성은 점차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 맥락에서 특별히 중요한 예로 서로 다른 문화들 간의 대화와 소통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의 강화를 들 수 있다. 2005년에는 독일유네스코위원회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협약을 국제법률행위로 지정하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기도 했다. 2007년 2월에는 독일 연방 의회가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협약, 그리고 동시에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와 관련한 협약을 통과시켰다. 독일은 201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협정에도 가입하였으며 이 협약은 독일에서는 2013년 7월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문화 부문의 유럽 내 국가 간 협력은 1992년부터 유럽 공동체(ECC)의 설립에 관한 조약 제151 조에 근거하여 시행되어 왔다. 이 조항의 내용은 마스트리히트 조약 128조<sup>8</sup>, 그리고 리스본

---

<sup>8</sup> 마스트리히트 조약(Maastricht Treaty)의 정식 명칭은 유럽연합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이다. 1992년 2월 7일 마스트리히트에서

조약 167조로 계승되었다.<sup>9</sup> 이 조약에 가입된 국가들은 공동의 법적 체도를 통과시키는 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예컨대 유럽연합 가입국가 간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 반환에 대한 법률인 Directive

---

서명, 1993년 11월 1일 발효되었다. 기존의 유럽공동체(EC) 가입국인 12개국(벨기에, 덴마크, 독일,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이 새롭게 유럽연합(EU)을 설립하기 위해 1991년 12월의 유럽이사회(EC 정상회의)에서 합의를 본 것에 기초하여 1992년 2월에 구성국 정부의 조인을 얻어 1993년 11월에 정식으로 발효했다. 네이버지식백과, 21세기 정치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소 참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27016&cid=42140&categoryId=42140>

<sup>9</sup>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어 무산된 유럽헌법조약을 대체하는 조약으로 2009년 12월 1일에 발효되었다. 정식 명칭은 유럽연합 개정조약(EU reform treaty)이다.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2007년 10월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최종 합의한 뒤 같은 해 12월 공식 서명하여 리스본 조약이라고 부른다.

조약의 내용은 유럽연합의 내부 통합을 공고히 다지고 정치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일종의 '미니 헌법' 성격을 띤다.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 백과 “리스본 조약” 항목 참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82758&cid=40942&categoryId=3165>

96/100/EC”, 혹은 유럽연합의 문화 창조 산업인 창조유럽Creative Europe 프로젝트(2014-2020) 등이 그것이다.<sup>10</sup>

창조유럽은 CULTURE와 MEDIA (Mesures pour Encourager le Développement de l'Industrie Audiovisuelle)라는 두 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협업, 그리고 유럽연합 회원국과 제3국 간의 협업을 지원한다. 창조유럽 프로젝트의 목적은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을 증진하고 장려하는 것 이외에도 특히 문화 및 창조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 과거에 유럽 연합의 독자적인 프로그램이었으나 2013년에 만료가 된 CULTURE, MEDIA 그리고 MEDIA MUNDUS와는 달리, 창조유럽의 프로그램을 위한 기금은 9%가 증가하여 1.46 14억 6천 유로에 달했다. 산하 프로그램인 CULTURE는 전체 금액의 31%를 사용하게 되어있다.

독일 내에서 이 프로그램의 문화 기금 및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전달 및 안내를 전담하는 사무실은 프로그램에 따라 CULTURE는

---

<sup>10</sup> 창조유럽(Creative Europe)은 그 동안 시행해 오던 문화프로그램과 미디어 프로그램을 통합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운영하는 새로운 문화정책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문화를 통해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자국의 경제성장을 꾀함과 동시에 유럽 전체의 새로운 공동체 의식을 심화 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시행이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특히 특수한 지역적 차원을 고려하면서 지역개발 정책의 통합을 위한 필수 요소로 문화·창조산업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자세한 내용은 창조유럽프로그램 홈페이지 참조.

본과 MEDIA는 포츠담/베를린, 뒤셀도르프, 함부르크와 뮌헨에 소재해 있다.

유럽연합의 문화기금 프로그램이 후원하는 특별한 정책의 하나로 유럽문화수도 사업을 들 수 있다.<sup>11</sup> 독일의 경우에는 1988년에 베를린, 1999년에 바이마르, 2013년에는 루르(RUHR) 지방을 대표하여 에센이 유럽문화수도로 선정된 바 있다. 유럽문화수도가 한 국가에서 너무 자주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양한 국가에 균등하게 기회가 주어지도록, 일종의 국가별 의무 휴지기를 두기로 한 규정이 2014년에 추가되면서 독일에서는 2025년에 네 번째 도시가 유럽문화수도가 될 예정이다. 독일의 어떤 도시를 유럽문화수도로 선정할지는 여러 연방주와 연방외교부, 연방교육및문화상시위원회 등이 여러 단계의 논의와 경합을 거쳐 결정할 것이다.

---

<sup>11</sup> 유럽 문화 수도(European Capital of Culture)는 유럽 연합회원국의 도시를 매년 선정하여, 1 년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각종 문화 행사를 전개하는 사업이다. 1983 년에 그리스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고 있던 멜리나 메르쿠리가 유럽 문화 도시(European City of Culture) 사업을 제안했고 1985 년 그리스의 아테네가 최초의 유럽 문화 도시로 바뀌어 오늘에 이른다. 2018 년 현재 유럽문화수도는 네덜란드 북부의 도시 레이우아르던(Leeuwarden)과 몰타의 수도 발레타(Valetta)이다. 위키백과 “유럽문화수도” 항목 참조. 자세한 내용은 자체 홈페이지 참고:

[https://ec.europa.eu/programmes/creative-europe/actions/capitals-culture\\_en](https://ec.europa.eu/programmes/creative-europe/actions/capitals-culture_en)

그 외에도 문화 기관 운영자가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유럽연합 기금 프로그램이 있다.<sup>12</sup> 자세한 내용은 유럽연합의 문화 지원 사업과 관련한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예컨대 “시민을 위한 유럽”이라는 이름의 프로그램 등이 그 예이다.

이와 비슷한 예로 Horizon 2020(EU Framework Programme for Research and Innovation)에는 일부 문화 관련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으며,<sup>13</sup> 특히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의 유럽 - 종합적, 혁신적, 고찰적 사회”라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문화 관련 주제에 대한 특별 모집도 진행된다.

유럽 평의회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2008년에 시작한 “인터컬처시티프로그램” 역시 상호문화적 다양성을 증진,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도시들은 상호문화적 전략 및 정책의 개발, 수립에 대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sup>12</sup> 자세한 내용은 유럽연합의 문화 지원 사업과 관련한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www.europa-foerdert-kultur.info>.

<sup>13</sup> Horizon 2020 은 유럽연합에서 진행하는 연구 및 혁신 프로그램 중 최대 규모 프로젝트로 2014 년에서 2020 년까지 7 년에 걸쳐 총 800 억 유로에 이르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여기에 민간 업체로부터의 투자 비용까지 합쳐진다고 가정하면 그 규모가 가히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발견과 혁신으로 창조적 아이디어를 연구실에서 시장으로 연결시킨다는 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 참조.

<https://ec.europa.eu/programmes/horizon2020/en>

독일에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독일 도시로는 베를린-노이쾰른, 뒤스부르크, 도르트문트, 엘랑겐, 뮌헨, 함부르크, 오펜부르크가 있다.

독일이 유럽 연합 이사회 의장국을 맡았던 2007년에는 유럽의 문화 정책이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으며 이를 각국의 국내 문화정책과 보다 밀접하게 연관시키는 것에 대한 논의도 특별히 강조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독일 유네스코 위원회와 문화정치협회(Cultural Policy Association), 그리고 문화 정책 및 창조산업(Büro für Kulturpolitik und Kulturwirtschaft)이라는 세 개의 국제문화 정책 회의를 통해서 주로 다루어졌다.

### 직접 교류와 협력

그 외에도 독일의 모든 연방주에 속해 있는 지역 공동체들은 이에 규모나 지역적으로 대응이 될 만한, 타국의 도시들과 양방향, 혹은 다각도의 지역적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있다. 상대 국가는 대체로 유럽이 주를 이루지만 비유럽권 국가에서 파트너십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국경을 넘나드는 문화교류는 소위 "Euregios"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1970년대 이후로는 많은 민간 주체와 전문 기관(예를 들어 극장, 박물관, 도서관 등), 그리고 비공식 네트워크들이 자체적으로 국제적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오고 있다.

연방 외교부는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지만 괴테 인스티튜트나 대외관계연구소(Institut für Auslandsbeziehungen, ifA)와 같은 소위 중개자 역할을 하는 기관들을

통해 관련 기금을 후원하고 있다. 독일문화원이라고도 불리는 괴테  
인스티튜트는 해외에서 독일어 교육을 장려하고, 영화나 무용, 음악,  
연극, 전시, 문학, 번역 등 문화예술 행사나 축제 등을 개최함으로써  
국제 문화 교류를 장려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삼고 있다. 추가적으로  
연방외교부가 후원하는 기관 및 프로그램으로는 학생과 과학자들의  
국제교류를 지원하는 기관인 독일 학술교류처(DAAD), 그리고  
시각예술, 문학, 음악 분야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베를린에서 1년간  
거주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베를린의 예술가Artists  
in Berlin“ 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와 더불어 외교부에서는 대외문화정책에 지대한 영향력을 지니는  
주요 문화 프로젝트를 지원하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예술적 수준은  
물론이고, 지역적 우선성, 지속가능성, 그리고 상대국가의 기관이나  
저명한 개인과의 파트너십이 강조된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이다.

이외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업무 분야는 개발도상국가의 문화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혹은 개발도상국가 출신 예술가의 독일 내  
문화 행사 참여에 대한 지원이다. 이러한 맥락에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는 베를린 소재의 세계문화의전당(Haus der  
Kulturen der Welt)을 들 수 있는데, 콘서트나 낭독회, 전시회,  
학술대회 등을 외교부와 공동으로 주관하고 이에 대한 기금을  
외교부에서 받는다.

## 국경을 초월하는 상호 문화 교류와 협력

지난 몇 년 동안 연방정부는 특히 외교부를 중심으로 국가간 문화교류와 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주력해 왔다. 그 중에서도 독일 유네스코 위원회가 연방 외교부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 “쿨투어바이트Kulturweit”가 주목할 만하다.

2009년에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적 문화 자원 서비스로 청년들에게 독일의 외교부에서 6개월 내지 12개월 동안 대외 문화 및 교육 정책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중부 및 동부 유럽의 개발도상국가 출신의 청년들에게 할당된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젊은이들의 상호문화주의 능력을 강화하고 대외 문화 관계 및 교육 정책에 대한 가시성을 높이는 데 있다. 쿨투어바이트는 유네스코 독일 위원회가 주관하며 독일의 대외문화 및 교육 정책 파트너 기관들에 의해 실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이 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 중 하나는 독일 연방 문화재단(Bundeskulturstiftung)으로, 이 재단에서는 국경을 초월하는 상호문화 소통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sup>14</sup> 그 중 몇가지 예를 들자면, "국제박물관장학금 Fellowship Internationales Museum"과 2012년에 만들어진 독일과 아프리카의 예술적 협업을 위한 기금 "TURN“등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

<sup>14</sup> <http://www.Kulturstiftung-des-bundes.de> 참조.

민간 재단 중에도 상호문화 교류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재단들이 많이 있다. 메카토어 재단(Stiftung Mercator)은 “국제교류” 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며 보쉬 재단(Stiftung Bosch)은 국제적 이해의 증진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알리안츠 문화재단(Allianz Kulturstiftung), 베르텔스만 재단(Bertelsmann Stiftung), 폭스바겐 재단 (VolkswagenStiftung)을 포함한 열 두 개의 독일 재단들이 모여서 만든 “참여하는 유럽인 Engagierte Europäer”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유럽의 통합을 공고히 하는 데 목적을 둔다.

현재 상호문화주의 소통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논의는 이슬람 세계 및 이슬람 문화, 그리고 아시아,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 일본, 한국의 문화와의 관계에 대한 것들이다.

#### 1.1.4. 문화정책의 주요 현안과 논란

동유럽의 체제 붕괴와 1989/90년 독일의 재통합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문화적 과제를 안겨주었다. 이는 동서독이 통합된 연방 독일공화국 내에서의 문화 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의 이웃국가들과의 관계에도 적용되는 것이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공적 자금의 재정이 축소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연방주의 문화 정책에는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러한 경향은 2000년대 이후에도 점차 심화되었다.

2008-2009년의 세계금융경제위기 역시도 공공 및 민간의 문화 후원 기금에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었다. 금융위기가 이어지는 기간

동안에는 민간의 문화 지원 사업이 축소되었다. 반면 금융위기가 공공 기관에 미친 영향은 2010년과 2011년의 문화 관련 예산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났다. 2010년에는 경제상황이 호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에는 전반적으로 공공부채가 증가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도달하였다. 특히 지역의 단체와 기관들이 부채액의 증가로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 몇 년 동안 지역 당국의 권한과 업무는 증가했지만 재정적 지원이나 수입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현재, 공공 문화기관에 대한 압박은 지역의 관청 뿐만 아니라 연방주 정부 차원에서도 높은 편이다. 동시에 그 책임과 권한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연방정부는 2011년에 문화 관련 비용을 증액시켰는데, 이는 연달아 5회에 걸친 증액이었다. 그러나 연방의회에서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공동체에 문화 장려를 위한 재정지원을 해주는 내용의 발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지난 10년 동안 공공 및 민간 기관의 문화 관련 논의와 활동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초점을 맞추었다:

- 새로운 연방수도 베를린의 문화 기관을 위한 지원
- 문화 행사 관련, 연방주의 권한 확대
- 각기 다른 정부 사이의 문화 기금의 간소화와 최적화
- 저작권 분야 및 재단 조세, 전업 작가 사회보장 조건 강화 및 관련 법안 통과

- 문화 교육의 장려
- 문화 산업의 육성
- 불법 취득된 문화 자산의 본국 반환
- 문화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유네스코 회의
- 문화에 대한 헌법상의 보호
- 시민의 문화 참여 확대 및 강화
- 문화 향유 대중의 점차 다양해지는 요구
- 이민자, 문화다양성, 상호문화적 협력
- 문화 기반시설의 디자인
- 개념에 기반한 연방주 문화정책
- 대서양 교류와 투자 공동체 지원
- 연방주 소유 예술 작품의 판매
- 홈볼트 포럼 재건축
- 작품 이력 연구

2013년 11월, 연방문화미디어처의 발표에 의하면, 현재의 입법 회기 동안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문화 관련 이슈는 다음과 같다: 작품 이력

연구와 관련한 법안 개정, 연방과 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협력 관계 강화, 인구 구성의 변화를 반영한 문화 기반시설 개발 전략 보장, 전업 예술가를 위한 예술가사회보험(Künstlersozialversicherung)의 시스템 안정화, 디지털 환경에 맞는 저작권법 보완, 문화유산의 디지털 자료 구축, 문화재의 국외 반출을 방지하는 문화재보호법에 대한 개정, “디지털 아젠다”와 홈볼트 포럼이다.

### “수도 문화Hauptstadt Kultur”

1990년대에는 독일연방의회인 분데스탁(Bundestag), 16개 연방주 대표로 구성된 연방평의회 분데스라트(Bundesrat), 그리고 연방정부(Bundesregierung)가 모두 통일독일의 새로운 수도인 베를린으로 이주하였다.

권력이 이전 수도인 본에서 베를린으로 옮겨가면서 새로운 수도의 국가적 문화적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고,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베를린의 문화 관련 정책에 있어 그 권한과 의무가 점차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방정부와 베를린 시 사이에는 연방정부의 지원 범위를 상세히 규정한 “수도 문화 계약”이 체결되기도 했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베를린 박물관 섬 내에 있는 박물관의 개보수 작업
- 기존에 베를린 주에서 관리한 문화기관(베를린 유대인 박물관 재단, 예술아카데미, 제2차세계대전 독일내 저항세력 기념관 등)

- 베를린 축제, 마틴그로피우스 바우 미술관, 세계문화의 전당, 베를린영화제 등의 문화 행사
- 2006년에는 연방정부가 베를린 내 오페라 극장 세 곳(Deutsche Oper, Berlin Staatsoper, Komische Oper Berlin)의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재정의 투입 결정
- 2007년 가을에는 연방의회가 4억 유로의 특별 문화기금을 신설하였는데 이 중 2억 유로는 베를린 국립오페라(Berlin Staatsoper)의 보수에 투입되었다.
- 2008년 초, 연방정부와 베를린주 사이에 체결된 새로운 연방수도 재정 계약의 발효되었다. 여기에는 베를린의 문화사업과 관련한 기존의 지원을 지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효력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다.
- 베를린의 문화사업을 후원하기 위한 “수도 문화 기금” 역시 연방정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는다. 2008년 이후로 연방문화미디어처의 주관으로 연간 9,866,000,000 유로의 예산이 여기에 책정된다.

### 문화사업에 대한 연방의 권한 확대

1998년에는 연방정부의 문화 관련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연방문화미디어처를 신설하고 이에 상응하는 기구로 연방 의회 산하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002년에는 연방문화재단(Kulturstiftung des Bundes)이 설립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정부기구들의 신설과

관련하여 초기에는 거세 비판이 제기되는 등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으나, 근래에는 점차 긍정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 영역에 있어서 연방정부의 관여 범위를 두고 현재까지도 간헐적으로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2006년과 2009년 5월에는 연방제개혁 1, 2 단계(Föderalismusreform I, II)가 시행되었는데, 이는 기본법을 개정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관계를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2006년 9월 연방제개혁 1단계에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의 권한에 대한 보다 명확한 분담이 명시되었다면, 2009년에 발효된 개혁 2단계에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재정적 관계에 대한 재구축이 집중 사안이 되었다. 여기에 필수적 내용 중 하나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부채 금액에 대한 상한선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 **문화 후원의 간소화 및 효율 극대화**

연방문화재단의 창설 시점 당시에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에 열띤 토론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 내용은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를 간소화하고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 그리고 연방주문화재단(Kulturstiftung der Länder)을 연방문화재(Kulturstiftung des Bundes)과 합병하는 문제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두 재단을 합병하려는 협상과정은 2003년 12월에 결렬되었고 연방정부는 2005년 말부터 연방주문화재단에 대한 관여를 중단했다. 2006년 12월에 또 다시 재협상이 결렬되자 각 재단은 통합 대신에 보다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는 데 합의했다.

2006년에는 모든 차원의 문화 정책과 관련하여 문화 기금을 평가하는 광범위한 작업이 수행되었다.

2007년, 독일연방의회가 착수한 “독일의 문화” 심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자, 그 이후로 몇년간 연방정부 차원의 문화 정책에 대하여 많은 토론과 논쟁이 일어났다. 연방의회 소속 11명과 문화정책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심리위원회는 500페이지 이상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는 수많은 전문가들의 보고서와 의견개진, 그리고 공청회를 토대로 한것으로 인터넷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sup>15</sup> 이 보고서는 독일의 예술, 문화 후원, 그리고 예술가의 지위에 대한 현황 설명과 더불어 문화의 지원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추천안 400여개 그리고 다양한 문화 분야 및 문화 정책 관련자를 위한 법적 체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법적 규제

1998년 이후로 연방정부는 재단 법(특히 조세 부분), 저작권법, 그리고 예술가를 위한 사회보장을 관장하는 법과 관련하여 법률의 개정을 시행해 왔다. 2006년 여름과 가을에는 저작권법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위한 초안이 연방정부에 의해 발의되어 예술가에게 지급되는 비용과 관련하여 큰 논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 법안에는 도서정찰제의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과 연방영화진흥법에 따라 영화 부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2006년에는 연방정부가 영화 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에

---

<sup>15</sup> <http://dip21.bundestag.de/dip21/btd/16/070/1607000.pdf>

합의했으며, 이는 2007년 초부터 시행되었다. 2008년 11월에는 독일연방의회가 영화진흥법의 개정안을 비준하였다. 영화진흥법에 대한 여섯 번째 개정안은 2010년 여름에 채택되었으며 2014년 여름에는 일곱 번째 개정안이 도입되었다.

연방정부는 또한 연방추방자법(Bundesvertriebenengesetz) 96조에 의거하여 동유럽과 중앙유럽의 독일문화 연구 및 독재정권의 희생자들을 기리는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의 범위를 확대했다.

2009년과 2010년에는 음악 분야 등의 제작과 관련, 디지털 방식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면서 저작권과 관련한 공공의 논의가 확대, 심화되었다. 문화예술에 대하여 고정 저작권료를 적용시키는 방안에 대한 주장도 제기되었으나 당시 집권당의 반대로 실현되지는 못하였다.

저작권법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출판업자들은 위한 부수적 저작권은 2013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근래에는 몇몇의 연방주에서 도서관과 관련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는데 2008년 튀링엔 주를 시작으로 하여 그로부터 2년 후에는 작센-안할트(Sachsen Anhalt)주와 헤센(Hessen)주에서 차례로 발효되었다. 라인란트 팔츠(Rheinland Pfalz)주에서는 2014년에 도서관법이 채택되었고 슐레즈빅 홀슈타인(Schleswig-Holstein) 주에서는 2015년 11월에 도서관과 관련한 새로운 법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2014년 12월에는 최초로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주에서 문화의 특정 분야가 아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연방주 차원의 문화법(Landeskulturgesetz)을 도입했다.

2015년 1월에는 전업예술가를 위한 사회보험보장법(Künstlersozialabgabensicherungsgesetz)이 발효되었다.

2015년 가을에는 문화적 자산의 철거 방지법에 대한 개정안이 연방정부 내각에 의해 채택되었다. 그리고 연방정의소비자보호부(Bundesministerium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 BMJV)에서는 예술가와 저술가의 합당한 보수 청구 집행과 관련된 법률의 초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 **문화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유네스코 조약**

문화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 및 증진하는 유네스코 협약을 국제적인 법적 기구로 발전시키는 과정에는 유네스코 독일위원회의 지지와 지원이 큰 역할을 했으며, 또한 시민사회와 독일 연방의회, 그리고 연방문화미디어처 등도 조력자 역할을 하였다.

독일의 연방정부는 2006년 9월에 협약에 서명을 했으며, 독일 연방의회가 2007년 2월 1일에 이를 통과시켰다. 독일은 협약 시행 후 첫 보고서를 2012년 4월에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독일의 관련 부처, 즉 연방주의 교육문화장관회의(Kultusministerkonferenz)와 독일시연합(Deutscher Städtetag), 그리고 유네스코 독일위원회 등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다.

독일위원회는 2004년에 시민사회를 포함시키며 문화다양성을 위한 연합을 구성했다. 이는 유네스코의 협정에서 독일의 발언권을 보다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이 연합은 문화, 정당, 협회, 경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 및 저널리즘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유네스코 협약을 보조하는 역할을 했다. 유네스코 협약이 2007년 3월에 발효된 이래로 이 연합은 계속해서 공공정책에 대해 자문이나 평가를 수행하는 등의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목적 하에 연합에서는 2009년 12월에, 유네스코 협약의 실시와 관련하여 독일과 유럽의 문화정책 관련한 추천안들을 망라한 백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게다가 2010년에는 “문화다양성 지도”라는 제목의 출판물이 프로그램의 프로젝트 중 하나로 유네스코 협약을 시행한 것과 관련하여 시 전세계의 성공적인 시행사례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2004년 이후로는 문화 다양성을 위한 연합이 12차례 회의를 개최했고, 2012년 4월에 진행된 10번째 회의에서는 유네스코 협약의 시행과 관련한 독일의 보고서 작성에 대한 첫 논의가 시작되었다.

### **헌법상의 문화 보호**

공공문화기관에 대한 지원금 및 기금은 국가나 지역의 경제상황에 따라 크게 타격을 받기 마련이다. 이로 인한 문제들을 방지하고자, 시민들의 “기초문화수요”와 문화기반시설 유지를 위한 법적 보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다양한 시민단체와 문화 관련 기관들은 오래 전부터 국가 차원에서 문화를 지원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 특별 조항을 독일 기본법(헌법)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이러한 주장은 독일연방의회의가 2007년에 발표한 심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에도 반영되었다.<sup>16</sup>

2009년 가을에 시행된 연방의회 선거가 진행되는 기간, 그리고 그 직후에도 이와 같은 요구는 반복적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었으나 현재까지도 실현되지는 못한 상태이다.

오랜 연방제 전통의 독일에서는 국가의 권한이나 의무가 확대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저항이 매우 큰 편이다. 예컨대 베를린 주는 “국가는 문화를 보호하고 지원한다”라는 문장이 포함된 새로운 조항 20b를 독일 기본법에 포함시키는 결의안을 냈으나, 2008년 10월, 각 연방주 대표들로 구성된 연방평의회 분데스라트에서 부결된 바 있다.

2009년에는 자유민주당(FDP)의 의회 내 교섭단체에서 문화를 기본법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률 초안을 도입하였으나, 이 역시 연방의회 위원회 회의에서 부결되었다. 2012년에는 사회민주당(SPD) 교섭단체에서 기본법을 확장하여 문화와 체육 부문을 포함시키는 법안을 제안했다. 여기에 독일 좌파당(Die Linke)이 가세하여 자체적인 제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 체육, 법률 전문가들의 주도로 본격적인 토론이 이루어졌으나 기본법에 문화 부문을 포함하는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

---

<sup>16</sup> <http://dip21.bundestag.de/dip21/btd/15/055/1505560.pdf>.

## 시민 참여

과거의 수세기 동안 문화 영역에 있어서의 시민 참여는 특수 분야나 기관, 프로젝트와 연계되어 있는 시민 단체들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독특한 점은, 이러한 시민단체의 활동이 특히 활발하게 이루어진 지방자치단위(시나 읍)들은 대체로 해당 지역의 지배세력인 귀족이 거주하지 않았던 곳이었다는 점이다. 지배귀족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귀족의 주도로 문화 기관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문화 참여 활동은 나치 시대 내내, 그리고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어려운 시기 동안 침체되어 있다가 점차 되살아났다. 이는 특정 문화 기관의 후원자 협회 가입이나 자원봉사, 기부금, 협찬, 공동투자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문화 관련 활동이 점차적으로 증가해온 경향을 통해 확인된다.

다양한 종류의 시민단체가 후원하는 문화활동이나 문화기관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사실 과거에는 주로 국가의 후원이나 각 분야 전문가문화정책이 주축이 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일반적이었으나, 민간의 참여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면서 문화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의식도 차츰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2005년 입법 회기가 끝날 무렵에 연방의회에서 시민 참여에 대한 심리위원회가 열린 결과, 새롭게 선출된 독일 연방의회에서는 시민 참여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2007년 7월에는 시민의 문화 참여 안정화와 관련된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통과되었는데, 이 법안에는 전문 트레이너의 면세 수당을 2,100유로로 올려주는 내용과 기부금을

수입의 20%로 일괄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2009년 봄에는 시민의 참여에 대한 전국 규모의 포럼이 시민참여를 위한 연방네트워크(Bundesnetzwerk Bürgerschaftliches Engagement)의 주도와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의 후원 하에 개최되었다.

이 포럼에서는 시민 참여와 관련한 정치적 아젠다를 만들어내고, 연방정부가 시민 참여와 관련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2010년 10월에는 시민참여에 대한 국가 전략 및 기업체의 사회적 의무에 대한 실행계획이 연방정부 내각에 의해 채택되었다. 이 계획의 주된 목표는 시민 참여를 지원하는 다양한 개인과 단체, 이해당사자의 활동 간에 조화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는 데,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의무라는 관점 하에서 상업적 기업체의 문화 참여를 독려 및 통합하는 데 있었다.

## 문화재보호법 개정

문화관련 정책에 대하여 연방 정부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문화정책의 대표적인 예가 2016년 8월부터 시행된 개정 문화재보호법이다. 이번 개정안은 세계 2차대전 이후의 독일 문화정책에 있어 가장 큰 변화를 포함하는 내용이며, 최근 수년 간의 문화 관련 법안 중 가장 큰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개정 법안 발의자인 모니카 그뤼터스 연방문화미디어처 특임 장관이자 연방의회 문화미디어 위원회 소속이기도 하다.

문화미디어처의 발표에 따르면 법안 개정의 목적은 문화재 반입 관련 규제 강화를 통해 도굴문화재의 불법 거래를 방지하는 데 있다.

법안에 의하면 내전이나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에서는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의 도굴과 불법거래를 통해 테러단체나 범죄단체의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 삼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자국의 문화적 유산을 보호할 수 없는 국가에 대해서는 타국들이 그 책임을 분담할 의무가 있으며, 독일 역시 인류문화의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도굴문화재의 불법 거래 척결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문화재 반출 관련 규제 강화를 통해 국가적 가치를 지닌 문화재의 해외 유출 방지해야 한다는 논리가 구성이 되었다. 새로운 개정안은 1955년 시행법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문화재가 유럽연합 외의 제 3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라는 것이다.

이 법안 개정의 주요 진행경과는 아래와 같다.

- 2015. 11. 4. 개정법안 연방평의회(Bundeskabinett) 의결
- 2016. 6. 23. 개정법안 연방의회(Bundestag) 가결
- 2016. 7. 8. Bundesrat(연방의회) 동의
- 2016. 8. 6. 개정법안시행

법안 개정이 이루어진 주요 배경을 보면, 우선 2014년 5월 15일, “유럽연합가입국의 영토로부터 불법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반출 및 EU

규제 Nr. 1024/2012 의 개정에 관한 유럽의회와 상원의 2014/60/EU 지침”이 시행되었음에 주목할 수 있다.

이 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독일을 포함한 모든 유럽연합가입국가들은 이 지침에 따라 국내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문화미디어 특임장관 모니카 그뤼터스는 이러한 상황을 계기로 삼아, 기존에는 세 개의 법률 조항 하에 나뉘어져 있던 문화재 보호 관련 법률들을 문화재의 반출과 반입을 총괄하는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여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기존에는 “독일 문화재의 반출 방지보호법”, “문화재반환법”, “1954 년 5 월 14 일 무력분쟁 관련 문화재 보호 조약 실행법”의 세 가지 법에 의해 문화재 관리가 이루어져 왔다.

한편, 법률 입안 당시 CDU, CST, SPD 가 합의한 연정협약서는 법안의 개정 목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의 목적은 불법적 경로로 국내에 유입된 타국 문화재를 효과적으로 반환시키고, 독일 문화재를 해외 반출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하고 일관성 있는 법의 제정에 있다.”

기존에는 유럽연합 국가 중에서 독일과 네덜란드만이 다른 유럽연합 가입국으로의 문화재 반출이 별도의 승낙 절차 없이 가능한 국가였다. 따라서 독일 내에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문화재를 해외로 반출시키기 위해, 먼저 유럽연합 가입국으로 별도의

승낙절차없이 반출 시킨 후, 해당 국가의 국내법을 이용하여 제 3 국으로 반출시키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였다.

개정 법안 주요 내용은 크게 문화재 반입, 그리고 반출과 관련한 주요 개정 사항으로 나뉘볼 수 있다.

먼저 문화재의 반입과 관련한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문화재, 특히 고고학적 문화재를 독일 내로 유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가 최초 발굴된 국가의 국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허가증이 있어야 함.
- 독일 국내에서 문화재의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문화재의 국내 반입의 합법성 및 도굴문화재의 가능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보다 명확한 의무 규정 포함
- 이를 통해 출처가 합법적이고 투명한 문화재만이 골동품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함.
- 해외에서 불법적으로 반입된 문화재를 해당 국가에 반환하는 절차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규정 포함

한편, 이번 개정의 핵심 부분인 문화재의 국외 반출 관련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기존 법에도 특정 연도 이전에 제작되거나 특정 금액 이상의  
값어치를 지니는 문화재를 유럽연합가입국 이외의 국가로  
경우에 한해 반출승낙서(Ausfuhrgenemigung)를 요구하는  
조항이 있었다.
  - 여기서 규제의 대상이 되는 제작연도 및 시장가  
상한선은 문화재의 종류에 따라 여러 단계로  
구분되는데, 예컨대 회화 작품의 경우 제작연도가 50년  
이상이거나 시장가가 150.000 유로 이상인 경우가  
이에 해당
  
- 유럽연합 타가입국으로의 반출인 경우에도 반출승낙 절차를  
밟아야 함. 단, 이에 해당하는 문화재를 규정하는 기준은  
회화의 경우 제작연도 75년 이상, 시장가 300.000 유로  
이상으로 조정
  - 반출승낙서는 해당관청에 신청 후 최대 10일 내에  
신청결과가 결정되도록 규정
  - 공공 및 사립 미술관의 문화재 관련 상호 대여 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별도의 조항도 포함

이러한 개정을 통해 기존 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한다는 것이  
문화재보호법 개정의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예전에는  
독일에서 뉴욕으로 문화재를 손쉽게 반출하기 위해, 별도의 승낙 절차  
없이 (유럽연합 가입국인) 런던으로 먼저 반출시킨 후, 영국의 자국

문화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 승낙 절차 없이 미국으로 반출시키는 우회로가 있었으며, 이렇게 법을 우회하여 중요 문화재가 반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인 것이다.

이상은 주로 법안 발의 및 시행을 주도해온 문화특임부 정책 발표 자료나 연방상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사한 자료이며, 따라서 정부의 입장에 기반하여 법의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법안의 개정에 대해서는 학계와 예술계 등 현장의 비판 및 반발이 상당한 편이다. 쟁점의 핵심은 “국가적 가치를 지니는 문화재”라는 모호한 범주에 대한 비판, 유럽연합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보호주의적 성격이 강한 정책이라는 비판 등이다.<sup>17</sup>

---

<sup>17</sup> 독일 연방정부의 문화미디어처 특임 장관 홈페이지 내에 문화재보호법 관련 홈페이지가 있으며, 이에 개정법안의 구체적 법적 근거, 관련 언론 인터뷰 및 선언문, 자주묻는질문 등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음.

[https://www.bundesregierung.de/Webs/Breg/DE/Bundesregierung/BeauftragtefuerKulturundMedien/kultur/kulturgutschutz/\\_node.html](https://www.bundesregierung.de/Webs/Breg/DE/Bundesregierung/BeauftragtefuerKulturundMedien/kultur/kulturgutschutz/_node.html)

## 2. 문화예술 복지 정책 및 지원사업의 구체적 예

### 2.1. 예술가사회보험제도

#### 2.1.1. 제도의 설립 배경과 대상

독일은 문화국가라는 국가이념답게 예술인에 대한 복지에 오래 전부터 힘을 기울여 온 나라이다. 예술을 취미가 아닌 직업으로 삼아 활동하는 소위 전업작가들이 한 사회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맞닥뜨리는 어려움 중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적은 소득과 불규칙한 경제활동으로 인해 생계 유지 자체가 어렵다는 점, 나머지 하나는 의료, 사고, 연금, 실업보험 등 보통의 일반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오래 전부터 누려 온 여러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점이다. 독일 사회보험은 제도적으로 고용관계에 해당하는 개인의 경우에 한하여 의무 가입이 되기 때문에 전업 예술가들은 사회보험체계 안에 편입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에서는 1975 년에 연방의회에서 문화예술관련 직업들의 불안정한 경제적, 사회적 실태들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고, 대략 5 년 간의 입법과정을 거쳐 1981 년에 예술가사회보험법(Künstlersozialversicherungsgesetz, 약칭 KSVG)이 통과되면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1983 년에는 독일 북서부에 위치한 빌헬름스하펜(Wilhelmshaven)시에

예술가사회금고(Künstlersozialkasse)가 설립되면서 이 해부터 전업 예술가들도 법적으로 사회보험 가입 대상의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일반 근로자와 같이 의무적으로 연금보험, 의료보험 및 요양 보험의 제도적인 혜택을 받기 시작했다.<sup>18</sup>

## 제도의 대상

예술가 사회보험의 가입 대상은 기본적으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예술가와 저술가이다. 여기서 예술가는 음악, 조형 혹은 시각 예술(통상 미술이라고 지칭되는 분야) 분야에서 독립적으로 창작 혹은 교육하는 자를 지칭한다, 저술가는 저널리스트나 문학가 등 집필 활동을 하거나 집필과 관련한 교육을 하는 자를 의미한다. 비평가, 번역가 및 통역가, 학술분야 저술가, 그리고 홍보 나 광고 전문가도 여기에 해당된다. 다만, 예술가사회보험이 대상이 되려면 해당 활동을 통해 소득의 대부분을 벌고 예술가로서의 본업 외에 다른 곳에 고용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전제조건이 깔려 있다. 따라서 본업 외에 취미나 여가생활로 예술활동을 하는 이들은 제외된다. 예술을 배우는 학생의 경우는 해당 대상이 아니지만, 학업과 병행하여 예술가나 저술가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술가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자 신청하는 문화예술인들은 예술가 사회금고(Künstlersozialkasse)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

<sup>18</sup> 구동독지역의 예술가들은 재통일 이후인 1992년부터 이 법의 대상자가 되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예술사사회보험의 대상자의 분야별 비율은 아래의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sup>19</sup>

표 1.

연도	총대상자	저술(문학)	시각예술	음악	공연예술
2010	168,883	41,830	59,507	46,129	21,417
2011	173,284	42,599	60,767	47,613	22,305
2012	177,219	43,222	62,001	48,856	23,140
2013	179,593	43,358	62,542	49,957	23,736
2014	181,550	43,382	63,131	50,715	24,322
2015	184,046	43,477	63,962	51,527	25,080
2016	185,503	43,029	64,567	52,305	25,602
2017	186,949	42,119	64,916	52,854	27,060

### 2.1.2. 정부, 기업, 예술가의 보험 분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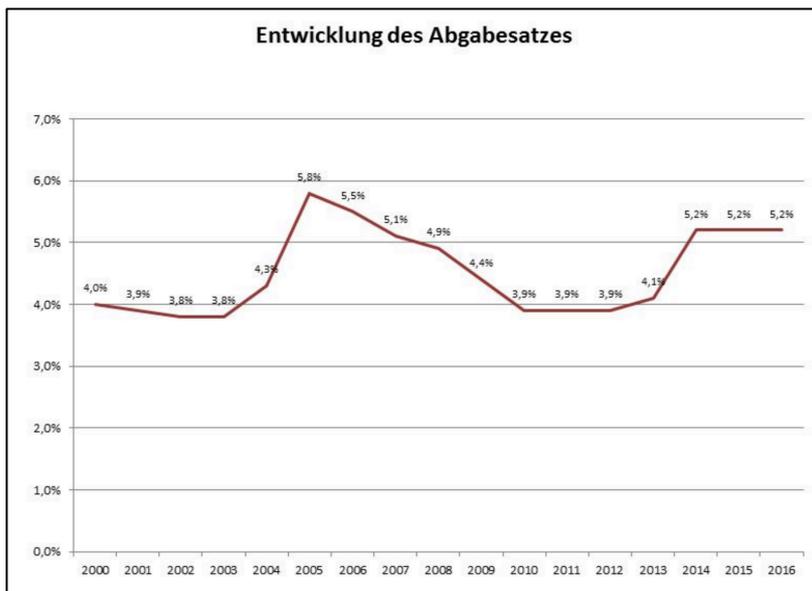
예술가 사회보험에는 의무적으로 연금, 의료, 요양 보험이 포함되어 있다. 이때 회원인 예술가는 전체보험료의 50%만 분담하고 나머지 50% 중 20%는 국가, 즉 연방정부의 보조금으로 충당되고 30%는 저작권 사용자가 부담한다. 저작권 사용자라 함은, 예술가 및 저술가의 작품을 활용하는 기업들을 의미하며, 예컨대 프리랜서 작가를

<sup>19</sup>

[https://www.destatis.de/DE/Publikationen/StatistischesJahrbuch/KulturMedienFreizeit.pdf?\\_\\_blob=publicationFile](https://www.destatis.de/DE/Publikationen/StatistischesJahrbuch/KulturMedienFreizeit.pdf?__blob=publicationFile), p. 201

고용하는 출판사나 화가의 작품을 판매, 전시하는 화랑 등을 포괄한다. 기업이 부담하는 이 30%는 예술가사회세(Künstlersozialabgabe)라고 불리는데, 어떤 형태로든 예술가나 저술가의 작업을 활용하는 기업들에게 일괄적으로 부과되며, 일정 비율의 세금이 전업예술가에게 업무 계약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보수에 적용되는 것이다. 이 비율은 매년 연방노동부에 의해 새롭게 조정되는데, 2018년 1월 1일에는 4.2%로 발표되었다.

표 2. 예술가사회세의 비율 변동 추이<sup>20</sup>



<sup>20</sup> Von Wikinger1980 – Eigenes Werk, CC BY-SA 4.0,

<https://commons.wikimedia.org/w/index.php?curid=46403149>

### 2.1.3. 보험 적용의 예

예술가 사회보험의 회원인 예술가가 개인적으로 지불하는 분담금은 각자의 재정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안정되고 규칙적인 수입원이 없는 문화예술분야의 직업적 성격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담금은 각자의 연간수입을 평가해서 결정된다.

예를 들어 연간수입이 1 만 2000 유로인 예술가는 연간 수입의 19.1%에 해당되는 연금보험, 13.6%에 해당되는 의료보험 그리고 1.7%에 해당되는 요양보험의 분담금 중 각각 50%에 해당하는 9.55%(월 95,5 유로), 6.8%(월 68 유로), 0.85%(월 8,5 유로)를 납입해야만 한다. 즉 연간수입 1 만 2000 유로의 17.2%인 2604 유로를 매달 172 유로 씩 나누어 내게 된다.<sup>21</sup> (오마이뉴스 기사, 20 년 역사의 독일 예술가 사회보험제도, 2003 년 5 월 9 일자, 백종옥, 참조. )

### 2.1.4. 제도의 정착과 현황

예술가사회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30 년이 지난 2013 년 8 월, 독일의 유력 시사지 슈피겔(Spiegel)에는 „관리 부실을 둘러싼 분쟁“이라는 제목으로 예술가사회보험제도의 운영 문제가 다루어졌다. 기사에는 예술가사회금고가 수년간 적자 운영되고 있으며, 그 이유로 명백한

---

<sup>21</sup> 백종옥, “20 년 역사의 독일 예술가 사회보험제도”, 오마이뉴스, 2003 년 5 월 9 일자 기사 참조.

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예술가세를 내지 않는 기업이 많으며, 이에 대하여 연금보험 측의 관리와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독일음악가협회(Tonkünstlerverband)가 기업에 대한 의무 규제를 강화를 요청하는 청원을 연방의회에 제기하였으며,<sup>22</sup> 해당 기사는 협회 대표와의 인터뷰로 구성되어 있다.<sup>23</sup>

이 기사에 따르면 예술가의 작업을 사업에 활용하는 모든 기업은 이 내용을 신고하여 예술가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업의 의무를 관리 감독은 2007년부터 독일 연금보험이 담당해 왔다. 초반에는 이러한 관리가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져, 이에 따라 세입이 증가하기도 했으나 2011년부터는 실제 신고된 예술가사회금고 기업체의 가입자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이 현저히 축소되어, 관리 상의 문제가 지적된 것이다. 이에 음악가협회에서는 최소 4년마다 기업에 대한 규제를 의무화 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독일연방의회에 제출한 것이다.

---

<sup>22</sup> 해당 청원서(청원 43188 호)는 연방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함.  
[https://epetitionen.bundestag.de/petitionen/\\_2013/\\_06/\\_10/Petition\\_43188.html](https://epetitionen.bundestag.de/petitionen/_2013/_06/_10/Petition_43188.html)

<sup>23</sup> „관리 부실을 둘러싼 분쟁 Streit über zu lasche Kontrollen“, 슈피겔 Spiegel, 2013년 8월 6일자 인터뷰 참조  
<http://www.spiegel.de/karriere/kuenstlersozialversicherung-streit-ueber-zu-lasche-kontrollen-a-914530.html>

이러한 노력의 결과인지, 실제로 2014년에는 연방내각에서 노동부장관인 안드레아 날레스(Andrea Nahles)의 발의로 예술가세 의무부과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기로 결정, 발표하였다. 이는 예술가사회보험의 제도를 안착시키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목표를 둔 조치이다. 해당 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은 기존의 연금보험이 지속하지만, 특별히 구체적으로 의심이 가는 사안에 대해서는 예술가사회금고가 독자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추가 권한도 부여하기로 했다. 예술가 작업을 간헐적으로만 활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450 유로의 최소금액제가 도입되는 내용도 함께 발표되었다.<sup>24</sup>

이러한 정책 발표 덕분인지, 현재 예술가사회제도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2018년 1월에 발표된 예술가사회세는 4.2%로 2년째 수치가 하향 조정되었다. 이는 2016년의 5.2%에 비해서는 1%나 감소한 수치이다. 이는 예술가사회세 의무 납부 기업의 수가 증가하면서, 개별 기업들의 부담이 그만큼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8년에는 총 17,000여

---

<sup>24</sup> Tagespiegel 2014년 5월 1일 기사, “예술사회세 의무 부과책 강화(Beitragspflicht zur Künstlersozialkasse wird besser kontrolliert)”  
참조. <https://www.tagesspiegel.de/kultur/kuenstlersozialversicherung-beitragspflicht-zur-kuenstlersozialkasse-wird-besser-kontrolliert/9830898.html>

개의 기업이 예술가사회금고에 예술가사회세 의무 기관으로  
등록되었다.<sup>25</sup>

---

<sup>25</sup> HAUFE 2017년 8월 9일자 기사 “2018년 1월 1일부로 예술가사회세  
감소“ 참조.

[https://www.haufe.de/personal/entgelt/kuenstlersozialabgabe-neuer-  
abgabensatz-liegt-vor\\_78\\_421266.html](https://www.haufe.de/personal/entgelt/kuenstlersozialabgabe-neuer-abgabensatz-liegt-vor_78_421266.html)

## 2.2. 예술가지원사업과 국제교류

### 2.2.1. 독일학술교류처의 레지던시 프로그램

독일학술교류처(DAAD)의 베를린의 예술가 프로그램 독일 학술교류처의 베를린의 예술가프로그램(Berliner Künstlerprogramm des DAAD)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권위있는 예술가 레지던시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시각예술, 음악, 문학, 영화 분야의 예술작가들을 대상으로 베를린에서 1년간 거주하면서 창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유럽과 전 세계의 예술과 문화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플랫폼이 되기를 지향한다. 매년 전세계 예술가들로부터 지원신청서를 받으며 총 20명에게 1년의 베를린 체류를 위한 장학금을 제공한다. 이 장학 프로그램의 대상자는 독일 이외의 국가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예술가이다. 이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예술가에게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예술적 시각의 다양성을 증진시키며, 예술과 언어의 자유를 확대, 강화하는 데 기본 취지를 두고 있다. 따라서 장학생으로 선발된 예술가들은 자신의 작업을 전개, 발전시키는 방법이나 다른 예술가들과의 상호 교류에 있어서 무한한 자유를 보장받는다. 이 부분은 특히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의 프로그램들이 참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독일과 한국의 레지던시 등 문화예술 지원 프로그램을 모두 경험해 본 다수의 예술가들에게 질문한 결과, 한국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예술가의 의무 조건이 상대적으로 많아 부담을

주며, 특히 행정업무가 많아서 예술 작업에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공통된 의견이 있었다.

## 지원 대상자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경력을 쌓은 (국내에서는 흔히 중견작가라는 표현을 사용함) 예술가로 베를린에 거주하면서 다른 예술가들과의 상호교류 속에서 작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연령 제한은 없다.

## 지원관련 특이사항

시각예술, 영화, 문학, 음악 분야 예술가 중 20 명 정도가 선발되며, 이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베를린에서의 거주 기간은 기본적으로 12 개월이나 영화 분야 예술가의 경우에는 6 개월이다. 예술가가 직접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신청서 마감은 매해 12 월 1 일이다. 그러나 시각예술 분야는 예외로, 별도의 선정위원회에서 국제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예술가들에게 먼저 초청장을 보낸다는 점이 특이하다. 따라서 시각예술분야 예술가의 지원신청서는 받지 않는다.

한편 문학의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함께 자신의 저작물을 (원고가 아닌) 출판된 형태로 제출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독일어나 영어, 프랑스어로 된 저작물을 권고한다. 따라서 국내 문학 작가가 지원할 경우에는 번역된 출판물이 있어야 한다.

## 장학금 혜택 내용

장학금에는 월별로 지급되는 생활비, (얼마인지 확인), 가구가 완비된 거주공간과 작업실(스튜디오)의 제공이 포함된다. 독일로의 여행경비와 필요한 장비나 짐의 운송료 역시 지급되며, 가족이 동반할 경우에는 가족의 여행경비까지 포함된다. 이 외에도 건강과 사고 보험, 그리고 독일어 어학교육을 위한 교육비도 제공된다.

## 시각예술 분야의 약진

시각예술 분야는 예술가가 직접 지원신청을 할 수 없고 별도의 선정위원회에서 국제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예술가들에게 먼저 초청장을 보낸다는 점이 특이하다. 그런데 이 분야에서 국내예술가들이 최근 두각을 드러내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이 프로그램이 1963 년에 시작된 이래로 처음으로 장학생으로 선정된 예술가는 재독 작곡가 윤이상이었으며, 초반에는 음악 분야의약진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2018 년 현재까지 장학금의 혜택을 받은 국내 출신 총 9 명의 예술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시각예술 분야였다(아래의 표 1 참조). 특히 가장 최근에 장학생으로 초청된 한국예술가들은 세 명(2009 년 서도호, 2015 년 김성환, 2016 년 임민욱) 이 연달아 시각예술분야의 작가였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2009 년부터 2018 년까지 최근 10 년간 이 프로그램의 장학생 목록을 분석한 결과, 매년 5 내지 6 명, 따라서 지난 10 년간 총 58 명의 시각예술 작가가 선정되었다. 이 중 국가별 분포를 보면 미국과

캐나다가 각 4 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대한민국과 프랑스, 콜롬비아, 멕시코가 각 3 명으로 그 다음을 잇고 있다. 같은 동아시아권 국가인 중국과 일본에서는 10 년 동안 1 명의 시각예술 작가가 초청된 것에 비하면 주목할 만하다고 볼 수 있다.

표 3. 베를린의 예술가 프로그램에 참여한 역대 대한민국 출신 예술가들

연번	이름	연도	분야	출생연도
1	임민욱	2016	시각예술	1968 년생
2	김성환	2015	시각예술	1975 년생
3	서도호	2009	시각예술	1962 년생
4	김석준	2009	음악	
5	신수정	2003	음악	
6	홍형숙	2000	영화	
7	차우희	1985	시각예술	1945 년생
8	강석희	1980	음악	
9	윤이상	1964	음악	1917-1995

표4. 최근 10년간 시각예술 분야 장학생 출신국가<sup>26</sup>

	연도	전체인원	장학생 출신 국가
1	2018	6 명	이탈리아, 싱가포르, 크로아티아, 타일랜드, 오스트리아, 스페인
2	2017	6 명	레바논, 콜롬비아, 이집트, 캐나다, 가나, 멕시코
3	2016	6 명	프랑스, 터키, 대한민국, 이집트, 과테말라, 레바논
4	2015	6 명	영국, 벨기에, 대한민국, 체코, 뉴질랜드, 베트남
5	2014	6 명	타일랜드, 프랑스, 나이지리아, 싱가포르, 네덜란드, 중국
6	2013	6 명	캐나다, 인도, 나이지리아, 영국, 일본, 러시아
7	2012	6 명	폴란드, 콜롬비아, 에디오피아, 인도,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8	2011	6 명	파키스탄, 멕시코, 콜롬비아, 루마니아, 미국, 이라크
9	2010	5 명	미국, 미국, 멕시코, 스위스, 베네수엘라
10	2009	5 명	프랑스,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대한민국

<sup>26</sup> 이 표는 프로그램 홈페이지의 „guests“ 항목을 시각예술 분야로 한정하여 검색한 결과를 정리하여 만든 것이다.

### 2.2.2. 베타니엔 예술가의 집

베를린의 예술가 레지던시 프로그램 중 특히 시각예술 분야에 초점을 맞추며 국제적으로도 가장 명성이 높은 프로그램은 예술가의 집 베타니엔(Künstlerhaus Bethanien)이라는 이름의 기관에서 주관한다. 국내에서는 베타니엔의 파트너 기관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 역사

베타니엔이라는 이름은 현재 크로이츠베르크(Kreuzberg) 지구, 마리엔플라츠(Marienplatz) 광장에 위치한 건물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이 건물은 본래 19세기 중반에 프로시아의 황제 프레데릭 윌리엄 6세에 의해 설립된 병원이었으며, “베타니엔”이라는 명칭은 성경에 등장하는 도시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으로, 당시에는 보통 교회에서 운영하는 의료 및 복지기관에 붙여지는, 병원을 의미하는 일반 명사로 사용되었다.

병원이 문을 닫고 오랫동안 건물이 비어있는 상태가 계속되자, 1974년에 건물을 철거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당시의 야당과 보존주의자 단체가 중심이 되어 건물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기 위한 철거 반대 여론을 형성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종류의 재개발 계획이 제안되었으며, 그 중에서 선택된 것이 바로 베타니엔

예술가의 집의 설립자인 미샤엘 헤르터(Dr. Michael Haerdter)의 구상이었다. 헤르터는 2000 년까지 쿤스트하우스 베타니엔을 직접 운영했으며, 다양한 국제적 프로그램을 통해 이곳을 현대미술의 중요한 플랫폼으로 만드는 데 공헌했다고 평가받는다..

1975 년에 문을 연 이후로 베타니엔 예술가의 집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운영해왔다. 초기에는 무용과 문학, 음악, 사운드 아트, 연극, 건축 등 다양한 범주의 예술 활동을 다루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2001 년까지 지속된 영화 및 연극 연출을 위한 국제 워크숍은 이 분야 문화의 혁신과 교류를 증진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2010 년 6 월, 베타니엔 예술가의 집은 2000 년 이후로 운영을 맡아온 크리스토프 타네르트(Christoph Tannert)의 지휘와 베를린 복권 재단(Stiftung Klassenlotterie Berlin)의 재정적 도움 하에 마리엔플라츠의 건물을 떠나 새로운 자리로 옮겼다. 현재 베타니엔은 „베타니엔 예술지구“라는 이름 산하에 몇 개의 문화예술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베타니엔 예술가의 집은 „빛의 공장 Lichtfabrik“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옛 공장건물을 개조한 건축물을 본부로 사용하고 있다. 베를린에서 가장 젊고 활기찬

크로이츠베르크와 노이쾰른 지구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있다.

1912년에 지어진 이 건물은 조명제품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성공적인 업체였으며, 공장으로 운영될 당시에 800 명의 노동자와 175 명의 사무실 직원이 사용했을 정도로 규모가 크다. 1912년에 이 사업체를 설립했으나, 나치당의 집권으로 추방 등의 운명을 겪어야 했던 창업주 펠릭스와 레오 이스라엘(Felix Israel, Leo Israel) 형제를 추모하고 산업시대의 역사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현재까지도 „빛의 공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sup>27</sup>

## 주요 프로그램

### 국제 아틀리에 프로그램

쿤스트하우스의 대표 프로그램인 국제 아틀리에 프로그램은 전세계 차세대 예술가들의 양성을 위한 중요한 플랫폼으로 여겨진다.

이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예술가는 특정 기간(통상적으로 12개월) 동안 베를린에서 작업활동을 하면서 베를린의 예술계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베타니엔 프로그램에서 (타 레지던시

---

<sup>27</sup> 베타니엔 예술가의 집 역사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의 소개문 참조

<http://www.bethanien.de/kunstlerhaus-bethanien/geschichte/>

프로그램과 차별화하여) 중점을 두는 부분은 실제 베를린 예술계와 직접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예술가 개개인에게 최대한의 도움을 주는 데 있다.

예술가들은 베를린에 머무는 동안 월별로 생활비와 작업공간(스튜디오)을 제공받는다. 예술작업을 위한 재료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체류 기간 중 베타니엘 예술가의 집 갤러리에서 작업을 전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출판물의 제작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 오픈 스튜디오

베타니엔 예술가의 집에서는 연초에 한 차례, 여름에 한 차례, 그리고 최근에는 예술 행사가 집중되는 가을에도 레지던시에 머물고 있는 작가들의 작업을 일반에 공개하는 오픈 스튜디오를 개최한다. 베타니엔 예술가의 집에서 개최하는 오픈 스튜디오는 국립미술관에서 개최하는 기획전시 만큼이나 중요한 행사로 인식되며, 하루 저녁(보통 17시-22시) 동안만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매년 평균 800여명의 방문객을 끌어 들인다. 방문객은 미술관 큐레이터, 화랑의 갤러리스트, 예술학교 학생 및 일방 대중 등 다양한 구성을 보이는데, 국내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오픈스튜디오가 주로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만 관심을 받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오픈스튜디오는 작가가 본격적인 전시를 하기 이전에, 자신의 작품에 대해 잠재적 관람객이나 전문가들과 부담 없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창작자와 수용자 양측에게 매우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중요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

### 작업실 방문 프로그램

베타니엔 예술가의 집이 „국제아틀리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일종의 서비스 중 하나가 작가의 작업실을 방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이다. 즉, 모든 이에게 작가 작업실을 공개하는 오픈 스튜디오 외에도, 베타니엔 사무실을 통해 특정 작가의 작업실을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것이다. 이는 물론 일반인 보다는 관련 업계 종사자, 특히 새로운 예술가와 작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큐레이터들이나 평론가 등을 주된 대상으로 한다. 베타니엔 웹사이트에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아틀리에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든 예술가들의 이름과 기본 정보가 대표작의 사진과 함께 아카이브 형태로 정리되어 있으며, 특히 아틀리에 참여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거주 중인 작가를 검색하여 관심 있는 작가를 골라 기관에 방문을 요청할 수 있는 용이한 시스템이 갖춰진 셈이다. 그 외에도 베타니엔 측에서 주최하여 큐레이터와 저널리스트, 미술사가들을 초청하는 행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

## 특이사항

예술가 개인이 직접 지원신청서를 내는 DAAD의 레지던시 프로그램과는 달리, 베타니엔의 국제 아틀리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파트너 기관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 베타니엔의 파트너 기관은 전세계에 총 18개로 국내에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부산문화재단이 여기에 속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2005년부터 후원 약정을 체결한 이후로 매년 1인의 한국 작가를 파견하여 지원 중이며, 부산문화재단에서는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약정을 체결해 역시 매년 1인의 한국 작가를 지원해 왔다. 매년 전세계에서 총 25명의 작가가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년 두 명의 한국 작가가 포함되었던 2015년에서 2017년까지의 기간 중에는 한국 작가의 비율은 꽤 높은 편이었다고 볼 수 있다.

베타니엔과 후원 약정을 맺은, 일명 파트너 국가(Partnerländer) 이외의 국가에 거주하는 예술가들은 소속 화랑이나 자신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소장가, 혹은 다른 후원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적 지원을 확보한 후 참여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에는 베타니엔에서 내부 심의를 거쳐 해당 지원자의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 특별프로젝트

베타니엔 예술가의 집은 레지던시 프로그램인 국제 아틀리에 프로그램 외에도 다른 기관과의 협업 관계 속에서 간헐적으로 특별 프로젝트를 운영하기도 한다. 자체 전시 공간을 일종의 대관전시실로 제공하기도 한다. 이 때는 제 3자의 재정적 후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주제 혹은 매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시를 개최하여 관람객 층을 넓히기 위해 노력한다. 회화 작업을 하는 예술가에게 주어지는 팔켄로트 미술상(Falkenrot Preis) 수상자의 개인전을 개최하거나, 예술이 대도시 중심으로 번성하는 현상을 주제로 Berlin.Status 라는 제목의 특별기획전을 개최하는 등이 그 예이다.

## 출판

베타니엔 예술가의 집에서 진행하는 중요한 사업 중 하나는 출판이다. 설립 이래로 다양한 주제나 전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300여 개의 도록, 책, 정기간행물이 출판되었다. 특히 출판물의 제작자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편집 기능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결과물의 전문성을 높인다.

### 2.2.3. 예술가 체류허가 특혜

독일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고자 하거나 독일에서 고용의 형태로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인 원칙적으로 체류허가를 획득해야

한다. 이는 유럽연합 가입국이나 스위스, 아일랜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국민을 제외하고 모든 외국인에 해당한다. 체류 허가의 발급은 보통 출국 전 자국의 대사관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한국인의 경우는 최대 3개월까지는 비자나 별도의 체류허가 없이 독일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sup>28</sup> 독일 입국 후에 해당 주의 담당 관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베를린의 경우에는 외국인청(Ausländerbehörde)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베를린에서 장기간 거주하면서 고용 형태의 일이나 예술작업을 하고자 하는 예술가들에게는 체류법 21 조 5 항의 „자유업 종사자에 대한 체류허가“ 부분이 해당된다. 그런데 베를린 시의 경우에는 특별히 예술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예술가에 우호적인 내용이 덧붙여지는 것이 특징이다.

„예술가의 체류허가 심사와 관련, 이보다 상위에 있는 „예술 및 영화중심도시 베를린“의 사회경제학적 이익의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예술가의 체류로 인한 긍정적 기대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이는 시각예술분야의 작가 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음악가, 배우, 감독 등에도 적용될 수 있다. 현재까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라 하더라도

---

<sup>28</sup> 한국 외에도 이스라엘,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이 3개월까지 무비자 입국 및 3개월 이내 체류가 가능한 나라이다.

독창성이 뛰어난 경우에는 21 조 5 항에 근거하여 체류허가를  
가능케 한다.“

유명 예술가가 베를린에서 체류허가를 받은 예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국 출신의 시각예술작가 아이웨이웨이(Ai Weiwei)의 경우가 있다.  
아이웨이웨이는 중국에서 추방 후 2015 년에 독일에서 3 년짜리  
예술가비자를 받았다.<sup>29</sup> 아이웨이웨이는 이 비자를 발급받은 후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비자 사진을 게재하여 화제를 일으키기도 했다.<sup>30</sup>

---

<sup>29</sup> „Germany grants Chinese Artist Ai Weiwei a three-year visa”, Reuters,  
2015.10.21.

<https://www.reuters.com/article/us-china-artist-germany/germany-grants-chinese-artist-ai-weiwei-a-three-year-visa-idUSKCN0SF11C20151021>

<sup>30</sup> 독일의 체류허가 관련 참고 사이트 목록

[www.touring-artists.info/visa-und-aufenthalt.html](http://www.touring-artists.info/visa-und-aufenthalt.html)

[www.berlin.de/labo/willkommen-in-berlin/einreise/visumsverfahren/](http://www.berlin.de/labo/willkommen-in-berlin/einreise/visumsverfahren/)

[www.auswaertiges-](http://www.auswaertiges-)

[amt.de/DE/EinreiseUndAufenthalt/Visabestimmungen\\_node.html](http://amt.de/DE/EinreiseUndAufenthalt/Visabestimmungen_node.html)

[www.auswaertiges-](http://www.auswaertiges-)

[amt.de/DE/AAmt/Auslandsvertretungen/Uebersicht\\_node.html](http://amt.de/DE/AAmt/Auslandsvertretungen/Uebersicht_node.html)

## 2.3. 연방 수도 베를린 시의 문화예술지원사업

### 2.3.1. 사업의 운영방식 및 체계

베를린 주의 문화 담당 행정부는 연간 4 억유로의 문화 관련 예산을 지출한다.<sup>31</sup> 이 예산의 95% 정도는 70 여개의 문화기관의 정기적 후원을 위해 사용된다. 나머지 5%는 개별 프로젝트후원금에 투입이 되는데, 여기에 수도문화기금(Hauptstadtkulturfonds)도 포함된다.<sup>32</sup> 물론 재정적 후원의 대상이 되는 프로젝트나 기관은 비영리적, 공익적 성격을 띠어야 한다는 사실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문화 행정에 있어서의 기본원칙은 기금의 후원은 고정 비용을 지급하거나 적자 혹은 부족액을 지원해주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후원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효율성과 간소성, 목적부합성이 기본 요건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민간의 참여가 있을 경우 공적 후원은 그에 대해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어떤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프로젝트의 후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시되는 원칙은 투명성과 절차의 공정성 그리고 평등성이다. 프로젝트 후원 및 기금 수여에 대한 결정은 무엇보다도 예술성에 대한

---

<sup>31</sup> 베를린 주의 문화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베를린 주 홈페이지 ([www.berlin.de](http://www.berlin.de))기관 소개 부분에 상술되어 있으며, 조직도와 실행계획안도 직접 다운받을 수 있다.

<https://www.berlin.de/sen/kultur/wir-ueber-uns/>

<sup>32</sup> 수도문화기금에 대한 내용은 본 논문의 2.3.2. 문화예술기금의 종류 부분 참조.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데, 각각의 지원신청서에 대해 독립적인 전문가 평가단과 자문위원회들이 소집되어 심사를 하게 된다. 심사에 참여하는 전문가 평가단과 자문위원회는 각 전문 분야의 인물들을 균형적인 비율로 선별하여 구성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구성 자체를 새롭게 바꾸어 형평성을 기한다. 모든 결정은 정보 공개가 원칙이며 주정부의 중앙데이터뱅크에 기록된다.

정치적 기관 후원의 경우에는 주의회(Abgeordnetenhaus)에서 복식예산(double budget)의 분할이라는 틀 속에서 결정한다. 과거에 국립기관이었던 문화예술기관 중 상당수는 최근 몇 년 동안 법적으로 자립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이 과정에서 운영과 관련한 책임은 각 기관의 관련 재단과 유한책임회사(GmbH), 그리고 주정부 예산관리처로 이전되었다. 주정부의 문화행정 담당부서는 공공 기금의 운용이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감독의 책임을 진다.

또한 주의회는 문화와 예술의 생산과 공급, 가치의 기초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에 대한 후원을 담당한다.

### 2.3.2. 문화예술기금의 종류

베를린 시 행정부는 베를린에 거주하는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후원 및 장학기금 수여 등의 형식을 통해 창작 지원을 하고 있다.

시에서 기금 형태로 지원하는 경우는 시각예술, 공연예술, 사진, 뉴미디어, 문학, 음악 등 비영리적 문화예술 부문 (상업영화 제외)이며 서로 다른 분야가 접목된 학제간협업 프로젝트 역시 대상이 될 수 있다. 시의회의 문화 담당 부서는 문화 교류 및 상호문화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을 후원한다. 여성예술가 프로그램은 영상과 영화, 시각예술과 작곡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 예술가에게 장학금과 프로젝트 후원금을 지원한다. 또한 공동재정기금 프로그램을 통해 베를린에서 거주, 활동하는 예술가 개인이나 단체들이 각종 후원 기금 주체에 공동 후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장치도 운영하고 있다. 이 경우 이미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아닌 계획 중인 미래의 프로젝트만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다만 기존에 진행중이었으나 보다 넓은 범위의 향유층을 확보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도 별도로 운영된다. 문화 담당 부서는 또한 문화 유산의 보존을 위한 프로젝트의 하나인 문화 자산의 디지털 자료 등록 작업을 후원한다. 모든 후원 사업은 기본 원칙들을 바탕으로 한다. 즉, 신청 사업에 대한 심사와 결정, 예산의 분배 등을 결정함에 있어 예술창작의 자유와 독립성, 투명성, 공정성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고려된다. 이러한 원칙들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매년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자문단과 심사단이 심사와 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베를린 시에서 주관하는 기금 프로그램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분야간협력프로젝트 기금 (Spartenoffene Förderung)**

기금의 2/3 는 소위 독립예술분야 부분, 1/3 은 기관에 수여된다. 베를린에서 거주하며 활동하는 예술가나 기획자 개인 및 단체가 대상이 된다. 특히 베를린시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독자성이면서도 현대사와 관련 있는 프로젝트가 우선권을 가진다.

#### **공동재정기금 (Kofinanzierungsfonds)**

베를린에서 활동하는 전업 예술가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독립예술분야의 발전을 위한 기여가 중요한 기준이다. 특히 공동재정기금을 후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후원기관에 대한 보조후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순수예술 뿐만 아니라 연구 프로젝트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베를린문화교육 (Kulturelle Bildung in Berlin)** 문화교육의 가치와 의미를 제고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베를린 시의 문화정책의 핵심 사안 중 하나이다. 문화교육의 기본 범위는 학교내 교육, 학교 외 교육, 일반인 및 어린이청소년 문화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베를린 문화교육의 중점은 무엇보다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교육에 있으며 베를린의 풍요로운 문화예술자산을 유치원과 학교 등의 교육기관과 긴밀하게 연계시키는 작업을 주요 과제로 한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베를린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문화서비스(Jugendkulturservice) 사업에서는 해마다

가족패스(Familien Pass) 소책자를 발간하는데, 가족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각종 문화 예술 관련 행사에 대한 안내와 가격 할인, 쿠폰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매년 새롭게 편집된다.<sup>33</sup>

**문화유산디지털화 (Digitalisierung Kulturelles Erbe):** 베를린 시에 소개한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아카이브 등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유산을 디지털 데이터로 기록하는 작업에 대한 지원사업이다. 주된 목적은 베를린 시나 소장 문화기관을 대표하는 중요한 문화자산들에 대한 정보를 디지털로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데 있다.

**기존작업의발표를 위한 기금 (Wiederaufnahmeförderung):**

문화예술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부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대체로 신규 프로젝트의 계획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문화기금들과는 달리, 이미 진행 중이거나 과거에 진행한 경험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장기적 차원에서 보다 넓은 관객을 대상으로 재연될 수 있도록 후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베를린에 거주하며 활동하는 예술가 개인이나 독립 단체들이 대상이 되며 모든 분야를 망라한다.

**여성예술가지원 기금 (Künstlerinnenförderung):** 영상과 영화, 시각예술과 작곡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 예술가에게 장학금과 프로젝트 후원금을 지원한다

**상호문화프로젝트 기금 (Interkultureller Projekte):** 이 기금은 이민자의 비율이 높은 다문화 도시인 베를린의 문화적 환경을

---

<sup>33</sup> <http://jugendkulturservice.de>

특징적으로 반영한다. 이민자 출신으로 베를린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9 년에 만들어졌다.

**국제문화교류기금(Internationaler Kulturaustausch):** 각 분야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예컨대 베를린과 파리 시 간에는 만화와 그래픽 소설, 시각 예술, 음악, 문학, 무용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프로그램이 있으며, 이 외에도 예술가들의 해외 레지던시를 후원해주는 프로그램, 해외 체류를 위한 여행비 기금 등이 있다.

**현대사 및 기억문화 프로젝트 기금 (Projektfonds Zeitgeschichte und Erinnerungskultur)<sup>34</sup>:** 독일이 제 2 차세계대전 및 홀로코스트와 관련하여 느끼는 공공 영역의 책임의식이 제도적, 정책적 차원에서 어느 정도로 세밀하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책 중 하나이다. 베를린 시의 역사적 책무 차원에서 현대사 교육과 관련한 프로젝트를 후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공공 및 민간 기업, 조합, 전문가 단체 및 개인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

<sup>34</sup> 기억문화(Erinnerungskultur, Culture of Remembrance)는 개인 및 사회가 자신의 과거와 역사를 인식하고 다루는 태도 혹은 방식을 의미한다. 특히 집단 기억이 역사적, 문화적으로 표현, 가시화 되는 다양한 방식과 관련된다. 독일에서는 나치 집권 하에서 자행된 유대인 학살과 폭력을 기억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https://de.wikipedia.org/wiki/Erinnerungskultur> 참조.

**작업공간 (Arbeitsräume):** 특히 시각예술과 음악, 공연예술 부문에서 작업공간을 대여하거나 작업실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워크숍 등이 있다.

**문학기금 (Literatur):** 문학의 기반시설 확충, 독서문화와 문학활동 장려, 문학작가 번역가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춘다. 만화장학금, 외국문학 장학금, 문학가 레지던시 프로그램 등이 있다.

**음악기금 (Musik):** 노이에무직(현대음악, 클래식 모더니즘, 사운드아트 등)<sup>35</sup>이나 합창 분야의 프로젝트나 장학금 지원, 재즈 프로젝트 후원 및 연습실 제공 등의 종류가 있다. 재즈 관련 지원 프로그램이 많다는 것이 특이사항이다. 2013년에는 베를린 시의회가 베를린 대중음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음악위원회 „Musicboard Berlin“을 설립하였다. 이 위원회는 모든 종류의 대중 음악을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혁신적, 창조적 아이디어를 후원함으로써 베를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음악가들이 국내외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음악계의 창조적 활기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sup>36</sup>

---

<sup>35</sup> 노이에 무직(Neue Musik, 영어 new music) 은 중앙유럽을 중심으로 1910년 경부터 현재까지 발전되어 온 다양한 형식의 작곡 음악을 총괄하는 용어이다. [https://de.wikipedia.org/wiki/Neue\\_Musik](https://de.wikipedia.org/wiki/Neue_Musik)

<sup>36</sup> <http://www.musicboard-berlin.de/>

**시각예술기금 (Bildende Kunst):** 하나 회흐(Hanna Höch) 등 각종 예술상, 레지던시 프로그램, 예술가 교류 프로그램(시각예술의 경우 뉴욕, 도쿄, 로스앤젤레스, 이스탄불 등과 도시 차원의 교류프로그램 운영), 유학장학금, 연구장학금, 작업실지원금(작업실의 건축 및 개보수 등 지원), 근로장학금 등이 있다.

**공연예술기금 (Darstellende Kunst):** 연극, 무용, 퍼포먼스 등의 공연예술을 대상으로 한다. 무엇보다도 베를린에 소재한 중소형 규모의 민간 연극 극장이나 독립 극단을 위한 재정 후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주고 있다. 기금은 예술적 창작물에 대하여 지원된다.

문화예술 행정가들이 공연예술계의 새로운 혁신과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는데 기여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베를린 시의회에서는 단계적 후원 시스템을 도입하여 단기 프로젝트와 보다 장기적인 프로젝트들을 모두 대상으로 삼고 있다. 1 회성이나 단기 프로젝트에 주어지는 개별 프로젝트 기금이 있고, 극단이나 연극에 최대 2년까지 주어지는 기본 기금, 그리고 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4년간 기관을 지원하는 컨셉트 기금이 있다. 이렇게 장기와 단기 기금을 혼합한 형태는 소위 „옵니버스 원칙“에 기반하고 있으며, 여기에 참여했던 기관이나 단체 중 하나가 프로그램에서 나가게 되면(버스에서 내리게 되면) 새로운 자리가 열리는 방식이다.

한편 이외에도 해외에서의 프로젝트를 위한 여비 지원이나 연구, 공연장소 대여와 관련한 기금들도 운영되고 있다.

공공미술 및 퍼센트 미술기금<sup>37</sup> (Kunst im Stadtraum, Kunst am Bau)

베를린은 사실상 공공미술과 관련된 오래된 전통이 있다. 공공 건축물과 공간에 예술적 활동이 개입한 역사가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이다. 연계된 오랜 전통이 있다. 이러한 공공미술 성격의 프로젝트에 대한 기금은 국가 건축물 규제법에 따라 지급된다. 이 프로그램은 특별 자문위원회(Beratungsausschuss Kunst, BAK)의 도움을 받아 진행된다.

건축가나 시각예술작가, 디자이너들은 경쟁 공모나 초청 형태 등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경쟁 공모는 방식은 선정 절차와 결과의 투명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동시대 예술작품과 관련된 공공의 담론을 만들어내고 함양하는 기능을 지닌다. 공공미술과 퍼센트 미술의 작품은 베를린 전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일반 대중이 미술관이나 전시실 바깥에서

---

<sup>37</sup> 퍼센트 미술(영어: percent for art, 독어: Kunst am Bau)는 공공미술의 영역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보통 행정 조례나 법령을 통해, 공공 건축물이나 대규모 개발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의 일정 비율이 공공미술의 후원에 사용되도록 규정하는, 일종의 공공미술 후원 방식을 의미한다. 유럽과 미국에서 시작되었는데, 예컨대 아일랜드에서는 1997년부터 모든 공공 건축물의 건설 시 사업비의 1%를 공공미술 작품 제작에 사용하게끔 되어 있으며, 미국에서는 연방 주들의 절반 이상이 이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있다.

일상적으로 예술을 접하게 함으로써 소위 문지방을 낮추는 예술작품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sup>38</sup>

### 수도문화기금 (Hauptstadtkulturfonds)

연방문화미디어처 소관의 사업으로 연방수도인 베를린의 문화 지원을 위해 2007년 11월에 체결된 협약을 근거로 한다. 동시대문화 및 예술 프로젝트의 지원을 통해 베를린이 국내외적으로 문화 교류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기금은 (영화를 제외하고) 연방수도로서 베를린의 역할에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는 모든 예술 활동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국가적 혹은 국제적 영향력이 있거나 혁신적 성격을 띠는 프로젝트에 주어진다. 베를린을 위해 기획되고, 베를린에서 발표되는 프로젝트에 한한다. 상업적 성격이 강한 프로젝트, 베를린내 문화기관의 정기 프로그램에 속하거나 그 기금으로 운영되는 프로젝트, 혹은 다른 기관(독일연방문화재단, 공연예술기금 등)을 통해 연방 차원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프로젝트는 대상이 될 수 없다.<sup>39</sup>

---

<sup>38</sup> 베를린의 퍼센트 아트 관련 모든 프로젝트의 공모 과정과 결과물, 사업 내용은 베를린시 홈페이지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https://www.berlin.de/sen/kultur/foerderung/foerderprogramme/kunst-im-stadtraum-und-kunst-am-bau/kunst-am-bau/artikel.86173.php>

<sup>39</sup> <http://hauptstadtkulturfonds.berlin.de/>

### 2.3.3. 대표 프로그램의 예

#### 베를린 아트 위크와 아트 베를린

2012년부터 매년 가을에 5일간 열리는 베를린 아트 위크는 동시대미술의 여러 행사 중 하이라이트에 해당한다. 수많은 국공립기관과 상업갤러리, 개인예술가, 소장가, 프로젝트 공간들이 참여하며 프로그램의 종류와 수가 어마어마하다. 이 시기에는 중요한 전시들이 개막하기도 하고 예술영화 상영, 각종 미술상 수여, 아트 페어 등의 수많은 특별 프로그램들이 베를린 각지에서 개최된다. 예컨대 2017년에는 이 시기에 맞춰 하룬 파로키(Harun Farocki)와 같은 거장의 회고전이 열리는가 하면, 젊은 작가들을 위한 특별 주제전이나 다양한 장르의 그룹전과 개인전이 다양하게 개최되었다. 기사에 따르면 2017년도 베를린 아트위크 기간 동안 현대미술을 주제로 한 50여 개의 새로운 전시회가 개막하고 150여 개의 행사가 열렸다고 한다.<sup>40</sup>

베를린아트위크는 사실상 1996년부터 2010년까지 매해 가을에 베를린에서 개최된 국제아트페어 „아트포럼 Art Forum“이 운영 상의 문제로 갑작스럽게 중단된 것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아트포럼은 유럽 대륙에서 가장 규모가 크며 국제적 명성도 높았던

---

<sup>40</sup> “Kunstwoche: BerlinArt Week beginnt mit 50 neuen Ausstellungen”, Monopol, 2017.12.9. 기사 참조.

<https://www.monopol-magazin.de/berlin-art-week-beginnt-mit-50-neuen-ausstellungen>

아트페어였으나 참여 화랑들 간의 의견 차 등 운영 상의 문제로 2010년을 끝으로 완전히 폐지되면서 당시 베를린 미술계에 충격을 안겨주었다고 한다. 매해 가을이면 독일 전역, 그리고 동유럽과 북유럽, 중유럽의 화랑과 미술관계자들이 베를린에 모여들었는데 „예술가을 Kunstherbst“라는 조어까지 등장할 정도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예술가을“의 전통을 잇고자 2012년부터 베를린 아트위크가 다양한 예술기관들의 협업으로 개최되기 시작한 것이다.

2017년에는 베를린 아트위크의 중요한 주최 기관 중 하나인 abc (art berlin contemporary)라는 이름의 아트페어의 운영이 독일 최대 규모의 아트페어 조직인 아트콜른(Art Cologne)에 넘어가면서 명칭이 아트 베를린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점이 주목을 끌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베를린이 예술 창작과 전시 활동은 활발하지만 판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아트콜른의 운영으로는 처음 열린 이번 아트 베를린에서는 110여 개의 독일 및 외국 갤러리들이 참여했다. 총 참가국은 16개국이었다. 동시대미술이 중심이 되었지만 근대와 전후 미술도 일부 포함되었으며, 기존의 아트베를린컨템포러리(abc)의 컨셉을 그대로 계승하여, 한 작가의 소개에 집중하거나 본격적으로 큐레이팅된 전시 형태로 부스를 꾸민 화랑이 많이 눈에 띄었다.

### **예술도시로서 베를린의 현실적 딜레마**

앞 장에서 언급했듯, 베를린은 현 시점에서 동시대미술의 메카로 불리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수집가들이 많이 살고 있지는 않아, 작품 판매에 어려움이 많은 도시이기도 하다. 통일 이후 썬

물가와 집세 때문에 유럽의 젊은 작가들이 모여들면서 예술의 창작과 발표(전시 등)에 있어서는 유럽에서 가장 활발한 지역이 되었지만, 구 동독 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큰 기업이 거의 자리잡고 있지 않아 경제적으로는 독일에서 가장 가난한 연방주 중 하나로 평가되는 것이 베를린의 현실이다. 따라서 작품을 만드는 사람은 많으나 구입하는 사람은 현저히 적어, 많은 화랑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한다. (이에 비해 함부르크나 뮌헨, 쾰른, 뒤셀도르프 등의 구 서독 지역 도시들은 미술시장의 전통도 길고 뿌리가 탄탄하며 따라서 기업의 후원 문화도 더 발달해 있다.)

### 베를린 국제 영화제

베를린 국제 영화제(Internationale Filmfestspiele Berlin)는 줄여서 베를리날레(Berlinale)라고도 하며, 베를린에서 매년 2월 중순에 열리는 영화제이다. 1951년에 독일의 통일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시작되었다. 약 10일 동안 400여편의 장단편 영화가 상영된다. 세계 주요 영화제 중에서 가장 비평적 관점이 강조된 예술작품 발굴을 중시하는 영화제로 평가된다.

1951년 영화사학자인 알프레드 바우어(Alfred Bauer)를 디렉터로 개최된 것이 베를리날레의 시초이다. 처음에는 여름에, 1978년부터는 매년 2월에 개최되어 왔다. 제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예술의 도시로 번영했던 베를린은 서유럽과 동유럽을 잇는 일종의 거점 도시로서의 역할을 했다. 베를리날레가 개최된 배경에는 당시 서베를린에서 동유럽의 국가들에게 서방 측의 예술 문화를 어필하고자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한다. 1955년에 국제영화제작자연맹 FIAPF(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s Associations de Producteurs de Films)에서 영화제로서 공식 인정을 받았다. 처음에는 동유럽 국가들의 작품은 제외되었으며, 1974년에 구 소련이 처음으로 참가했다.

1976년에는 영화홍보 전문가 볼프 도너(Wolf Donner)가 제 2대 디렉터로 취임한다. 도너는 여름에 개최했던 영화제를 2월 개최로 바꾸고 어린이영화제를 신설하는 등 많은 부분에 대하여 변화와 개혁을 실행했다. 그의 뒤를 이은 제 3대 디렉터는 1980년부터 2001년까지 베를리날레를 이끈 모리츠 데 하델른(Moritz de Hadeln)이다. 하델른은 할리우드 영화에 중점을 두는 셀렉션으로, 비평적 부분을 중시하는 영화인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1994년 영화계에도 불어 닥친 GATT의 무역 분쟁으로 미국 측이 영화제를 보이콧하자 하델른시 방침은 큰 영향을 받았으며, 2000년에 해임을 당했다. 2001년 5월에는 디터 코스릭(Dieter Kosslick)이 제 4대 디렉터로 취임하여 2018년 현재까지 베를리날레를 이끌고 있다.

### **영화제 프로그램**

베르리날레는 경쟁 부문, 포럼 부문, 파노라마 부문, 회고전 부문, 청소년 영화 부문, 독일 영화 부문의 6개 공식 영역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각 영역의 디렉터가 있으며, 독립적인 운영 형식을 취하고

있다. 베를리날레가 열리는 기간에는 2004 년부터 시작된 베르리날레 스페셜이나 영화를 사고파는 유럽 필름 마켓도 개최된다.

### 경쟁 부문

세계적으로 우수한 영화 작품을 모아, 우수상에는 금곰상, 은곰상 등을 수여한다.

### 파노라마 부문

경쟁 부문에서는 벗어나지만 뛰어난 작품을 상영한다. 나중에 명성을 얻는 감독의 데뷔작이 이 부문에서 소개되는 경우도 많다. 작품의 테마, 질 모두 상당히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다큐멘터리 영화가 상영되는 경우도 많다.

### 포럼 부문

처음에는 젊은 감독 지원을 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이름도 이전에는 "영 포럼 부문"이었기 때문에, 신인감독들의 작품들이 많이 상영된다. 또한, 아방가르드 영화, 실험 영화, 르포 상영, 묻혀 있던 과거의 뛰어난 작품을 재상영하기도 한다. 2018 년도 포럼에는 한국영화로 홍상수 감독의 <풀잎들>과 신동욱의 <살아남은 아이>가 출품되었다. 한편, 포럼 익스텐디드라는 이름의 특별전에는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수상작인 송상희의 <다시 살아나거라 아가야>(2017)가 전시장에서 상영되어 눈길을 끌었다.<sup>41</sup>

---

<sup>41</sup> 포럼 익스텐디드는 비평적인 성격의 동시대미술전시장 아카데미 테어 퀴스테 Akademie der Künste 에서 개최된다. 본격적인 전시와

## 회고 부문

1977년 독일 키네마테크 운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거에 베르리날레에서 상영된 우수한 작품을 상영하고 있다. 매년 테마를 정해 특정 감독이 기능하는 경우도 있다.

## 어린이 영화 부문 (Kinderfilmfest)

1978년부터 있었으나, 2007년부터 연령대별로 다시 나뉘었다. Generation Kplus 은 4세 이상이 대상이며, 11명의 어린이 심사 위원이 최우수상을 선정한다. Generation 14plus 14세 이상이 대상으로, 7명의 어린이 심사 위원이 최우수상을 선정한다.

---

스크리닝으로 나뉜다. 2018년에는 전시 부문에 2명의 한국 작가가 초대되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1292118025&code=960202](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1292118025&code=960202)

### III. 요약 및 결론

이상에서 보듯, 독일은 문화국가를 표방하는 국가답게, 문화정책에 대한 역사적 전통이 깊고, 문화 지원에 대한 의식이 대체로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은 분단국가였다는 점에서 우리와 공통점이 있지만, 전통적으로 뿌리 깊은 연방제는 중앙집권제로 서울에 모든 문화 기반시설이 편중되어 있는 우리의 상황과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독일의 사례는 통일을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서울에 모든 권력과 문화의 집중이 문제시 되고 있는 우리의 불균형한 지역발전문제의 해결 차원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1 장에서는 독일 문화정책의 특징과 현안을 다루었다. 먼저 독일의 문화정책의 근본적인 이해를 위해, 제 2 차세계대전 이후의 발전사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동과 서로 분단되었던 시기의 서로 문화정책과 통일 이후의 문화정책을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통일이 문화정책에 끼친 영향에 대해 개관할 수 있었다. 또한 연방제가 뿌리깊은 전통으로 자리잡은 배경을 확인함으로써, 뒤에서 다루게 되는 각 행정 주체의 정책 개발 방향이나 권한의 범위를 이해하는 기반으로 삼았다. 그 다음으로는 문화정책의 특징을 다루었다. 먼저 문화에 대한 개념 정의, 문화 정책의 목적을 살펴본 후에, 연방제라는 행정체계 내에서 문화 행정의 각 주체와 그 기능을 정리해 보았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라는 세 단계의 행정 주체가 각각 어느 정도의 권한으로 문화정책을 시행하는지를 확인하고, 이 외에도 최근 중요한 문화

주체로 떠오르고 있는 민간 주체의 역할, 그리고 다양한 문화주체 간의 협업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보았다.

한편 국내문화정책 외에도 현대 사회에서 점점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대외문화정책도 본 연구의 중요한 대상으로 다루었다. 독일은 과거와는 달리 최근 몇 년 간 이민자의 수가 최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상호문화주의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커진 상황이다. 이는 역시 외국에서 유입되는 인구, 다문화 가정이 점차 증가하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중요하게 참고할만한 사안이다. 대외문화정책과 관련하여 국제문화교류에 대한 독일의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도 주목할 만하다. 우리가 현재 국가간 소통과 이해에 있어 문화, 그리고 예술이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음은 이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1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독일 문화정책의 주요 현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최근 몇 년 간의 문화계 주요 동향을 다루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흥미로운 부분이라 볼 수 있다. 우선, 통일 이후 새로운 수도가 된 베를린을 문화 예술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연방 차원의 노력이 많은 부분에서 확인되었다. „수도문화“라는 개념의 도입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사실 행정적으로는 수도에 해당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매우 낙후되어 있는 베를린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가능했던 것은 문화사업에 대한 연방정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몇차례의 법 개정 덕분이었다. 이는 연방제가 뿌리깊은 전통으로 자리잡은 독일에서는 많은 논란과 비판을 받기도 한 정책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베를린이 동시대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떠오르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연방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신설된 연방문화미디어처가 본격적으로 시행한 정책 중 하나인 문화재보호법 개정 역시 지난 몇 년간 논란과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문화재의 해외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이 법은, 국가의 지나친 규제로 자연스러운 문화교류를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 장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참고가 될만한 문화예술 분야의 복지정책과 지원사업을 다양한 예를 통해 정리했다. 우선, 독일에서 이미 30여 년 전부터 시행되어 온 예술가사회보험제도는 우리부 국정과제인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와 관련하여 참고할만 한 좋은 사례로, 제도의 설립배경과 운영방식, 정착과정과 현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한편, 역시 우리부 국정과제인 “문화교류, 협력 확대”와 관련하여, 국제교류에 초점을 맞춘 예술가 지원사업들의 대표적인 예로 세 가지 내용을 소개했다. 독일학술교류처와 베타니엔 예술가의 집에서 운영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국제적으로도 명성이 높으며 우리나라와의 연관성도 깊은 편이다. 마지막으로 예술가 체류허가 특혜는 독일, 그 중에서도 베를린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제도로, 베를린이 동시대 예술의 중심도시임을 제도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흥미로운 예라고 생각된다.

그 다음으로는 연방수도이자 일종의 예술특화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된 베를린 시의 자체 문화사업들을 살펴보았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베를린이 통독 이후 예술의 중심지로 떠오른 데는 크게 두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첫번째는 구동독 지역에 위치하여 기반 사업과 시설이 없어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점이다. 집세와 물가가 다른 유럽의 수도, 즉 런던이나 파리에 비해서는 물론이고 독일 내의 다른 도시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았던 통독 직후부터 자연스럽게 독일과 유럽의 예술인들이 모여들게 된 것이다. 두번째는 이런 자연스러운 현상을 연방과 시 차원에서 십분 활용하여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뒷받침했다는 점이다. 연방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문화 분야에서의 권한을 확대하여 베를린시의 문화수도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각종 문화예술 혜택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베를린 시에서는 “poor but sexy“라는 구호로 베를린의 매력을 어필하여, 전세계의 예술가와 혁신가들을 모으는데 성공했다.

이러한 점은 베를린시에서 운영하는 여러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베를린 시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각종 정책과 사업의 구체성과 치밀함이 돋보인다. 본 연구에서도 베를린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기금의 다양한 종류를 간단하게 소개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현재 운영되는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 행사 중 가장 규모가 크며 국제적인 명성이 높은 프로그램들 몇 개를 다루어 보았다. 시각예술분야에서는 베를린 아트워크와 아트 베를린, 영화분야에서는 베를린 국제영화제를 살펴보았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독일의 문화정책은 문화국가로서의 확고한 정체성과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세심한 역할분담을 바탕으로 개발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문화와 예술은 당연히 사회가 지원해야하는 것이라는 뿌리 깊은 인식에 근거하여, 그 주체인 연방정부와 주정부, 기업체와 민간단체 그리고 개별 시민이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이 현재 독일을 그 어느 나라보다 안정적인 문화 강국으로 만들어 낸 힘이라고 생각된다.

## 참고자료목록

### 1. 독일 문화정책 관련 자료 및 웹사이트

Ulrike Blumenreich, “Germany”, Council of Europe/ERICarts, "Compendium of cultural Policies and Trends in Europe, 17<sup>th</sup> edition”, 2016.

WorldCP International Database of Cultural Policies  
[www.worldcp.org](http://www.worldcp.org)

Compendium: Cultural Policies and Trends in Europe  
[www.culturalpolicies.net](http://www.culturalpolicies.net)

Europa Fördert Kultur  
[www.europa-foerdert-kultur.info](http://www.europa-foerdert-kultur.info)

Horizon 2020  
<https://ec.europa.eu/programmes/horizon2020/en>

### 2. 문화 정책 관련 독일 정부 및 공공 기관 웹사이트

연방의회문화미디어위원회  
[www.bundestag.de/kultur](http://www.bundestag.de/kultur)

대외관계연구소(Institut für Auslandsbeziehungen)

[www.ifa.de](http://www.ifa.de)

연방주 문화장관 위원회(Kultusministerkonferenz)

<https://www.kmk.org>

연방문화재단

<http://www.Kulturstiftung-bund.de>

베를린 시 웹사이트

[www.berlin.de](http://www.berlin.de)

Young Germany

<http://www.young-germany.de/>

독일학술교류처 Funding Programmes for musicians and artists

<https://www.daad.de/deutschland/stipendium/musik-kunst/en/>

### 3. 문화지원을 하는 민간기업 재단웹사이트

[www.volkswagenstiftung.de/](http://www.volkswagenstiftung.de/)

[www.bertelsmann-stiftung.de/](http://www.bertelsmann-stiftung.de/)

[kulturstiftung.allianz.de/de/](http://kulturstiftung.allianz.de/de/)